

#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연구

2023-04

정책연구

A Study of Improvement Plan for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Service

이성우  
조현성  
윤지연  
오문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f Improvement Plan for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Service

이성우·조현성·윤지연·오문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연구 책임

---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 연구

---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지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오문준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위원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연구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 추진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 시행의 효율성과 추진력 강화를 위한 인문 전담기관 역할을 검토하고, 지역 단위 인문정신문화 사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역할 도출 및 추진 체계 정립 등을 통해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전담기관 수행 역할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법률 시행령 제 11조에는 전담기관의 업무로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업무만 수행하였고, 1번과 2번에 대한 업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은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였다.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에서는 ㉠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 국내외 교류협력 등이 위탁업무로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시행령이든, 고시이든 전담기관의 역할은 인문정신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참여자와 이해관계자가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전담기관의 업무이다. 이것은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전담기관의 사례(시행령과 고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2. 전담기관 조직구성 방안

전담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체계에서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신설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가. 현행 체계하의 역할강화 방안

#### 1) 필수 역할

현행 인문정신문화 사업 전담기관 체제 안에서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확장과 관련된 운영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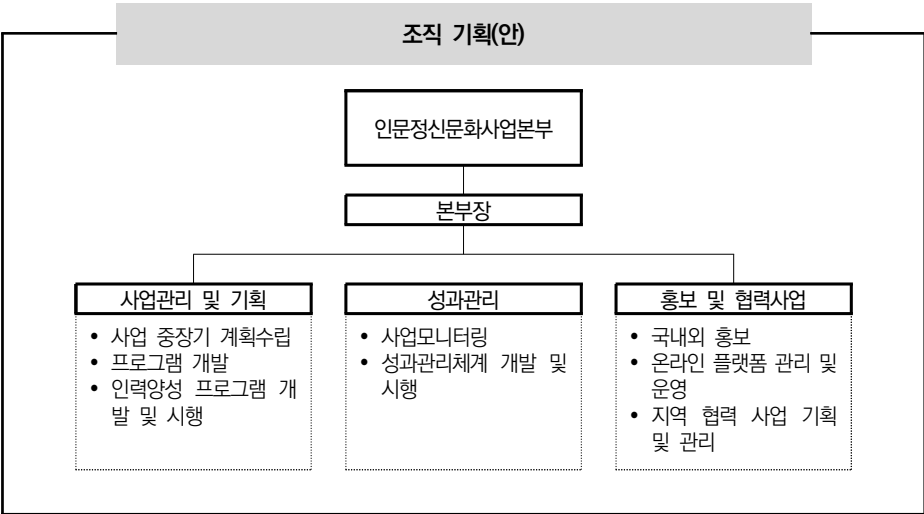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교류협력사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담기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고시처럼 연구와 조사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인문정신문화 진흥 연구와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구용역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전담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관리 및 기획,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조사 사업이 필수적이다. 초기에는 연구와 조사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점차 독립된 연구 사업을 수행하도록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 2) 조직 구성

이전 인문전담기관이었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현재 인문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모두 인문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하나의 팀만 구성하여 관련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와 같이 인문전담기관이 하부 단위의 사업에만 집중하여 역할을 수행한다면, 1개 팀 규모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자 한다면, 한 개의 팀 규모로는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연구, 홍보,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까지 수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운영예산도 지원되어야 한다. 운영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어느 기관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도 최소한 3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본부 또는 실 단위 사업으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표 1〉 전담기관 역할 강화 조직 기획안



### 3) 사업수행체계

그동안 문체부에서 직접 전담기관 이외의 사업수행기관에 예산을 배분하여 사업들을 수행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인문정신문화 사업 예산은 인문정신문화 사업 전담기관을 통해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인문정신문화 사업 체계를 일원화, 체계화 하고 예산 집행과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기존에 직접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들은 인문전담기관을 통해 사업을 배분받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신설 법인 구성 방안

두 번째는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것이다. 인문정신문화 사업만을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

### 1) 법적 근거 필요

법인 신설은 법률에 새로운 조를 하나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인문학 및 인문정

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장이 없이 조항으로 구성되기에 당장 장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조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한국문화예술연합회)를 참조할 수 있다. 새로운 「인문학법」의 조문(특수법인이 되는 기관의 이름) 1항~4항(법적 성격 및 설립등기, 규정 적용, 정관 및 임직원 등)에서는 일반적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5항에서 법인의 역할을 적시하고, 5항에서는 특수법인의 사업을 호별(號別)로 나열한다. 각호(各號)에 들어갈 내용은 현재의 고시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각호에서 특수법인의 역할이 규정되면 현재 고시에 표시된 법률 조항(예를 들어, 15조의 전문인력 양성, 제16조1항의 자료발굴 및 수집 등)은 삭제한다.

## 2) 필수 기능

전담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리 및 기획, 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아카이빙, 지역협력 및 국제교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효과측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면, 그 효율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신설 법인이 아니고서는 이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존 전담기관 체제에서는 기관들에 각자의 고유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문정신문화 사업만을 위한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성과관리, 홍보, 지역협력 및 국제교류 사업까지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 필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설 조직이 필수적이다.

## 3) 조직 구성

신설 조직에서는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성과관리, 홍보, 지역협력 및 국제교류 사업을 각각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전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를 증진하기 용이하다. 연구 관련 조직을 별도로 갖추면 좋을 수 있지만, 개별 업무별로 연구인력을 일정하게 배분하여 배치하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직 경영 및 관리 부서를 제외하고, 필수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팀, 성과관리팀, 홍보팀, 지역협력팀 등 최소 4개의 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기획팀은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성과관리팀은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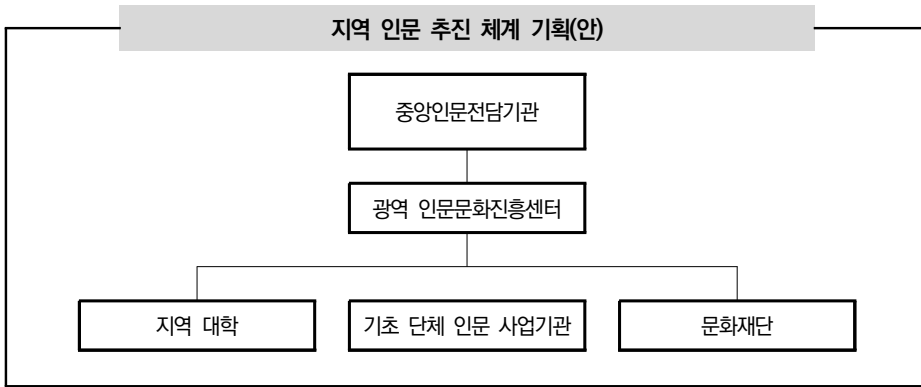
를 연구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홍보팀은 국내외에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홍보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지역협력팀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의 협력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지역단위 인문정신문화 사업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표 2〉 신설 전담기관 조직 구성 기획안



### 3. 지역 인문추진 체계 구축 방향

#### 가. 추진 체계 구성 방향



중앙의 전담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단위 기관은 일단 광역 인문문화진흥센터로 칭하고 논의를 진전시켜 본다. 중앙인문전담기관은 광역인문문화진흥센터에 대한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업무, 그리고 협력사업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한다. 업무의 기본원칙은 광역 인문문화진흥센터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광역 인문문화진흥센터는 광역 지역 특색의 인문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기초단체에서 수행되는 인문프로그램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지역 내 인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기초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문화재단과 문화원 등 관련 기관, 지역 내 대학 및 문화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 4. 인문문화진흥센터 사업 구성

광역별 인문문화진흥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기존의 인문정신문화 사업들이 유지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인문문화진흥센터의 사업으로 배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업 추진 체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실현되기 힘들다. 따라서 기존 사업들의 사업 대상 등을 포함하여

인문정신문화 사업들을 광역시도별 인문문화진흥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될 가능성이 더 크고 현실적이다. 지역별 인문문화진흥센터들은 지역 내 인문프로그램들이 보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수행체계를 명확히 갖추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광역시도별로 인문정신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특색의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가. 광역별 통합공모사업형태로 전환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인문문화진흥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대상 기관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기획하여 연차별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인문정신문화 사업 통합 공모에 지원하도록 한다. 기존의 인문정신문화 사업들이 진행해 온 사업 영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시설 등 다양한 지역 내 시설들에 세대별, 주제별, 목적별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다년간의 사업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중앙인문전담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자격 기준을 갖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인문문화진흥센터 지정 및 위탁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인문전담기관은 광역 인문문화진흥센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모니터링, 성과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하여 중앙인문전담기관과 지역 인문문화진흥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 사업을 모색하도록 한다.

〈표 3〉 통합공모 사업 프로그램 구성 주제 예시

주제	대상	지역	융합
예시	예시	예시	
인문치유	생애주기별 행사	광역 지역 전체	사회복지 연계
마을 공동체 육성	원주-이주민 협력	기초(시·군·구) 전체	농어업인 생활연계
전통문화 생활계승	신·중·노년, 노인...	농촌 중심지	지역관광 연계
인문지식함양	지역 내 취약계층	직장, 공장 등	생활체육+문화
.....	.....	.....	.....

기존의 사업 체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박물관 등 기존 주요 운영 시설과 주요 수요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지역 특색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추진 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존 주요 브랜드 사업들을 수행해 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인문역량과 문화역량 강화와 지역 인문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기초 마을 단위까지 생활인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운영의 효율화와 자치분권에 대한 기여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나. 통합공모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광역단위 통합공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계획할 때, 사업 운영목표를 구체화하고 세부 목표를 상세하게 설정하여 사업관리의 어려움을 예상한 기초 기획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율에 기반 한 방만한 사업관리가 나타날 수 있다.

광역 단위에 인문사업의 수행 지역 선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 진행 초기부터 광역 지역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 확대 계획이나, 문화적 취약 지역 우선 시행계획 등을 상세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통합공모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역할의 강화를 수반하여야 한다. 광역 단위에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년 계획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예산의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사업 예산계획은 광역센터 단위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공모사업으로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업무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인문문화진흥센터에서도 성과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역량의 차이에 대한 지원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중앙인문전담기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

# 목차

<b>제1장 서론 .....</b>	<b>1</b>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b>제2장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추진 체계 현황 .....</b>	<b>9</b>
제1절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필요성과 현황	11
1.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필요성	11
2. 인문정신문화 정책 현황	19
제2절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체계 현황과 문제점	23
1.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체계 현황	23
2.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석	26
제3절 소결	36
<b>제3장 행정 추진 체계 논의와 사례 분석 .....</b>	<b>39</b>
제1절 행정 추진 체계의 개념	41
1.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	41
2. 공공조직에 대한 개념 논의	46
제2절 행정 추진 체계 사례 연구	53
1. 직접 운영방식 사례	53
2. 공공/민간위탁 운영방식 사례	62
3. 공공기관 운영 방식 사례	75

4. 문화정책 부문 사례	86
제3절 소결	103
<b>제4장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b>	<b>105</b>
제1절 추진 체계 발전 방향	107
1. 기본 원칙	107
2. 전담기관 필수 기능	108
제2절 중앙전담기관 지정 운영 방안	111
1. 전담기관 수행 역할	111
2. 전담기관 조직 구성 방안	113
제3절 지역 인문 추진 체계 구성 방안	119
1. 지역 인문 추진 체계 구성 계획	119
2. 지역 인문 추진 체계 구축 방향	121
3. 인문문화진흥센터 사업 구성	127
제4절 소결	130
<b>제5장 결론</b>	<b>131</b>
제1절 연구 요약	133
1. 현행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체계상의 문제점	133
2. 행정 추진 체계 참조 사례 검토	135
3. 추진 체계 발전 방안	136
제2절 정책과제	137
<b>참고 문헌 / 139</b>	
<b>ABSTRACT / 147</b>	
<b>부록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 149</b>	

---

## 표 목차

〈표 2-1〉 제2차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 개요	20
〈표 2-2〉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사업 예산 현황(최근 3년간)	21
〈표 2-3〉 2022년도 인문정신문화 신규사업 세부예산 현황	22
〈표 2-4〉 인문정신문화 사업별 주요 내용과 담당 기관	24
〈표 2-5〉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26
〈표 3-1〉 공공기관 분류 기준	50
〈표 3-2〉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현황	50
〈표 3-3〉 심사조정 기관들	51
〈표 3-4〉 방위사업청 주요 업무	54
〈표 3-5〉 재외동포청 주요 업무	59
〈표 3-6〉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업 내역	63
〈표 3-7〉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센터 사업 내역	64
〈표 3-8〉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	65
〈표 3-9〉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67
〈표 3-10〉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전담 조직	68
〈표 3-1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요 사업	70
〈표 3-1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야별 사업 내역	71
〈표 3-13〉 공공기관 설립 및 지정	72
〈표 3-14〉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 내역	76
〈표 3-15〉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현황	76
〈표 3-16〉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2년 사업 성과	79
〈표 3-17〉 중앙사회서비스원 사업 내역	83
〈표 3-18〉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내역	83
〈표 3-19〉 문화정책 주요 전달 주체	87
〈표 3-20〉 중앙집중형 전달체계와 구성 주체의 역할	88
〈표 3-2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담기관	88
〈표 3-2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업무	90

〈표 3-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3년 주요 사업 현황	91
〈표 3-24〉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방 이양 현황(2022)	92
〈표 3-25〉 지역문화진흥법상의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업무	94
〈표 3-26〉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3(전담기관의 지정·운영)	94
〈표 3-27〉 지역문화진흥 정책 주요 추진 과제 및 사업	95
〈표 3-28〉 2022년 지역문화진흥원 보조금 현황	96
〈표 3-2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97
〈표 3-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 추진 사업	98
〈표 3-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예산	99
〈표 4-1〉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vs.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109
〈표 4-2〉 전담기관의 역할: 주요 내용	112
〈표 4-3〉 전담기관 역할 강화 조직 기획안	114
〈표 4-4〉 신설 전담기관 조직 구성 기획안	117
〈표 4-5〉 광역대표도서관 현황	124
〈표 4-6〉 통합공모 사업 프로그램 구성 주제 예시	128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과정	7
[그림 2-1] 국민 삶의 질 지표 최근 추세	12
[그림 2-2] 한국 소득 5분위 배율(2012~2021, 시장소득 기준)	15
[그림 2-3]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17
[그림 2-4] 현행 사업 수행체계하의 문제점	33
[그림 2-5] 인문전담기관의 중요 역할	34
[그림 2-6] 인문전담기관 운영 형태	34
[그림 2-7] 지역별 인문사업기관 지정 및 운영 필요성	35
[그림 2-8] 지역별 인문사업 운영 방식	35
[그림 3-1] 방위사업청 조직 구성	56
[그림 3-2] 재외동포청 조직 구성	60
[그림 3-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2022년 기준) 체계	67
[그림 3-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조직구성	73
[그림 3-5] 서울시50플러스재단 조직 구성	77
[그림 3-6] 서울시50플러스재단 조직 구성	79
[그림 3-7]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조직 구성(안)	81
[그림 3-8] 지방사회서비스원 조직 구성(안)	82
[그림 3-9]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직 구성	85
[그림 3-10]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도	92
[그림 3-11] 문화 사업 추진 체계 유형 구분	101
[그림 4-1] 광역문화재단 현황	122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 1. 연구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8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2016년 8월 4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인문정신문화 정책 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제1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을 추진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과 “인문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하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프로그램 참여자 수, 프로그램 개수, 매개자 양성 수 등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의 양적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2월 21일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하였다.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있는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비전 달성을 위해 “인문가치 발견 및 공유”, “인문가치 구현 및 확산”,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8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사회적 기여에 대한 강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제공 시설 다양화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소외계층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인문교실, 중소기업 재직자 인문프로그램 지원, 인문총서 제작지원, 시민협업프로젝트,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우리가치 인문동행 사업, 인생나눔교실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예산과 신규 운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속에서 사업 운영 체계의 개선과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들의 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한 시점이 되었다. 현재 인문정신문화 사업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여러 사업들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문체부의 감독하에 진행되지만, 각각의 사업에 기관마다의 특성이 반영되고 사업이 자율적으로 수행되다 보니 성과관리 등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사업의 효과성이나 성과관리에서 통일된 비교와 프로그램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들은 현재의 사업 수행체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할 시점에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체계 수립 방향성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 추진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 시행의 효율성과 추진력 강화를 위한 인문전담기관 역할을 검토하고, 지역 단위 인문정신문화 사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역할 도출 및 추진 체계 정립 등을 통해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 관계자 의견 분석, 추진 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 검토, 추진 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인문전담기관의 역할과 기관 설립의 필요성 검토

그동안의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 전담기관의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사업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신규 인문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련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 2) 지역인문 네트워크 구축방안 검토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보급과 확산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 자체의 인문정신문화 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중요 기관과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광역 단위에서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구성을 통하여 지역 단위의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여,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기반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

### 1. 연구 범위

#### 가.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기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는 2021년 12월에 발표된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논의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적 범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 부처와 기관 그리고, 사업 수행 기관이 있는 영역을 주로 하여 설정한다.

#### 나.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그중 첫 번째는 그동안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전담기관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파악이다. 두 번째, 인문정신문화 사업들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검토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 인문전담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있어 왔던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지역 인문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의 정리이다. 지역 인문 추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주체들이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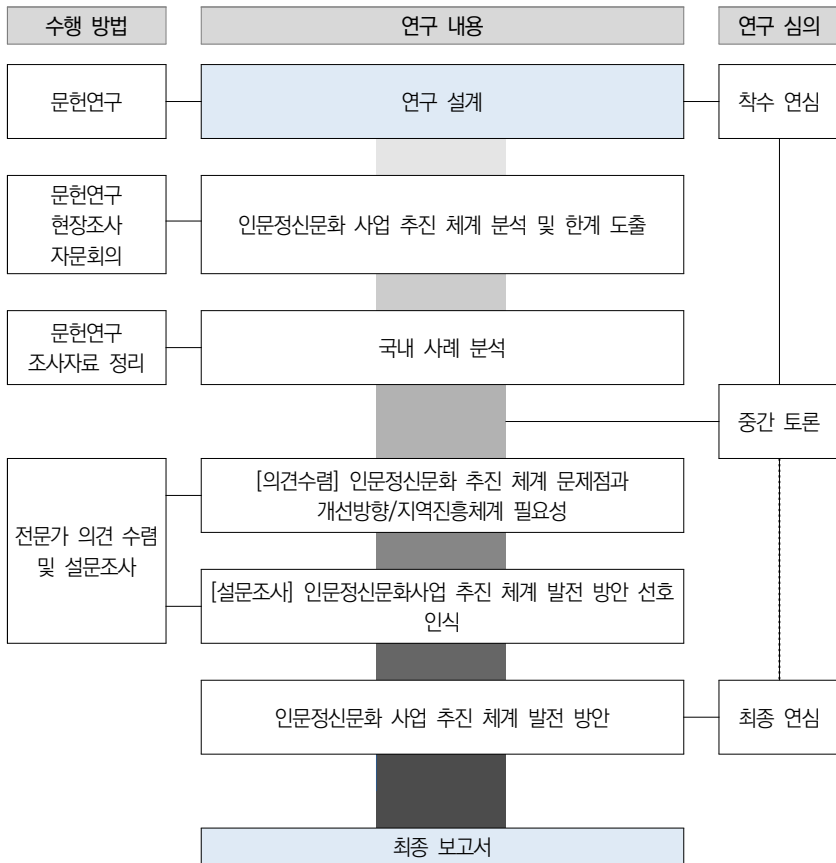
## 2. 연구 방법

첫째, 본 보고서는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한다.

둘째, 사례 검토를 실시한다. 행정조직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참조한다.

셋째, 행정조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행정 수단과 행정 조직이 유형과 기능 등을 검토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한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과정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제2장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추진 체계 현황





## 제1절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필요성과 현황

### 1.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필요성

#### 가. 삶의 질 악화

통계청에서 작성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sup>1)</sup> 내용에 따라 한국의 삶의 질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측정은 11개의 영역(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으로 구별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모든 영역을 다 보고하지 않고, 이 중 눈에 띄는 영역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 주고자 한다. 사회적 고립감, 자살률, 부정정서, 여가생활만족도, 여가시간 분야 등에서 지표 수치의 하락을 보여 주며, 코로나 위기 시기를 벗어나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지표에서 삶의 질 하락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1) 가족·공동체 영역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공동체 영역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기 대비 개선으로 가족과의 관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관계를 보여 주는 사회단체 참여율이나 지역사회 소속감도 개선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독거노인 비율은 악화되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상 독거노인 비율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거노인은 경제적 문제와 신체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측면에서 취약하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 우울감 등에 더 쉽게 노출된다. 독거노인 비율과 함께 사회적 고립도도 악화되었다. 사회적 고립도는 2019년보다 6.4%p 증가하여 2021년 34.1%로

1) 통계청 통계개발원(2023),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집계되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도  
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남성이며 연령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상대적  
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 국민 삶의 질 지표 최근 추세<sup>2)</sup>



2) 통계청 통계개발원(2023),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15.

## 2) 건강 영역

건강 영역에서는 자살률을 제외한 모든 지표들이 최근에 개선되었다. 자살률은 2020년보다 소폭으로 악화되었다.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 상태는 전기 대비 개선되었으며, 정신건강 측면을 보여 주는 스트레스 인지율과 개인들의 건강행태를 보여 주는 신체활동 실천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2020년 크게 악화된 후 2021년에는 전년보다 개선되었지만, 기존 추세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살률은 2021년 10만 명당 26.0명으로 전년 대비 0.3명이 증가하였다. 자살률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 주며,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동이나 불안정성이 증가할 때 자살률이 높아진다. 남성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여가 영역

여가 영역의 6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는 3개, 악화된 지표는 3개로 나타났다. 여가 영역 지표들의 최근 지표는 2021년 값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악화되었던 지표들 중 일부가 소폭으로 개선되었다. 여가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지표이고, 여가시간 충분도와 1인당 여행일수는 지표는 2020년에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2021년 소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지출률 지표는 최근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와 여가생활 만족도 지표는 2년 주기 지표로 2019년에 비해 악화된 것을 보여 준다. 문화여가 지출 감소와 충분한 여가시간의 부족이 드러나며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가 악화된 결과를 보인다.

## 4) 시민참여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는 사회의 전반적 발전과 이에 대한 다수의 향유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집합적 차원의 사회의 질이 개인의 일상적 영역에서 주관적 및 객관적 차원의 삶의 질로 뿌리내리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시민적 의무와 권리, 정치 참여, 신뢰를 포함하여 설정되었다.

시민참여 영역의 7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는 4개, 악화된 지표는 3개이다.

정치적 역량감과 부패인식지수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이루어진 정부의 방역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기관 신뢰도는 개선되었고, 대인 신뢰도도 2020년에 급격히 악화된 이후 2021년에는 개선되었다. 반면,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참여율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보여주는 선거투표율 지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폭 감소하여 악화되었다.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참여율이 악화된 것으로 볼 때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악화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 5)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 특히 개인 수준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주관적 웰빙 영역에 포함되는 3개 지표의 전년 대비 최근 추세를 보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개선된 반면, 부정정서는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큰 변화를 경험한 이후인 2021년의 값을 보여 주고 있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들은 2020년의 정세에서 다시 증가한 것을 보여 준다. 반면, 부정정서의 경우 2014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다시 악화되었다. 긍정정서는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정서(행복)를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고, 부정정서는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정정서(걱정, 우울감)를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다.

## 나.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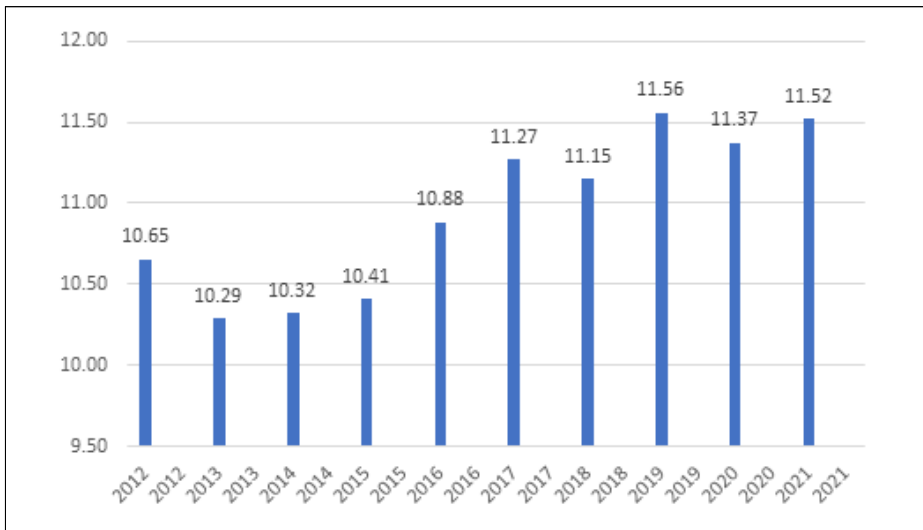
한국은 권위주의 시대에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정치, 사회, 경제 영역 전반에서 사회갈등 요소는 억압되어 왔다. 민주화 이후 억눌려 왔던 갈등들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상당 시간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갈등이 조정되는 효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기존의 계층, 학력, 지역, 세대 등의 갈등 이슈에서 환경, 젠더, 이민, 성소수자 이슈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며 갈등의 중첩화가 일어나 정치적·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경제적으로는 세대별 가구소득의 격차가 커지면서 상대적 빈곤층이 증가하고, 하위계층이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어 왔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으며, 실업자 양산과 당시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본격적

으로 영향을 주면서 소득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2000년대 들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는 커지게 된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한국 소득 5분위 배율(2012~2021, 시장소득 기준)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검색일: 2023년 5월 17일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급속히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등 제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고용 구조의 변화로 인한 소득 양극화 심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21년 13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2020년과 2021년 조사를 시행한 13개국 중 12개국에서 2020년 팬데믹 이전보다 2021년에 사회 내의 단절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통합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sup>3)</sup>

3) Kat Devlin, Moira Fagan and Aidan Connaughton(2021), People in Advanced Economies Say Their Society Is More Divided Than Before Pandemic, Pew Research Center.(출처: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1/06/23/people-in-advanced-economies-say-their-society-is-more-divided-than-before-pandemic/>)

한국은 2020년 36%에서 2021년 61%로 사회분열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자영업의 붕괴,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 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활용 수준의 차이 발생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sup>4)</sup>으로 불리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적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시스템, 조직 등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AR, VR 등 첨단 디지털 기술들이 도입되어 큰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디지털 기술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디지털 활용 능력 등에서도 계층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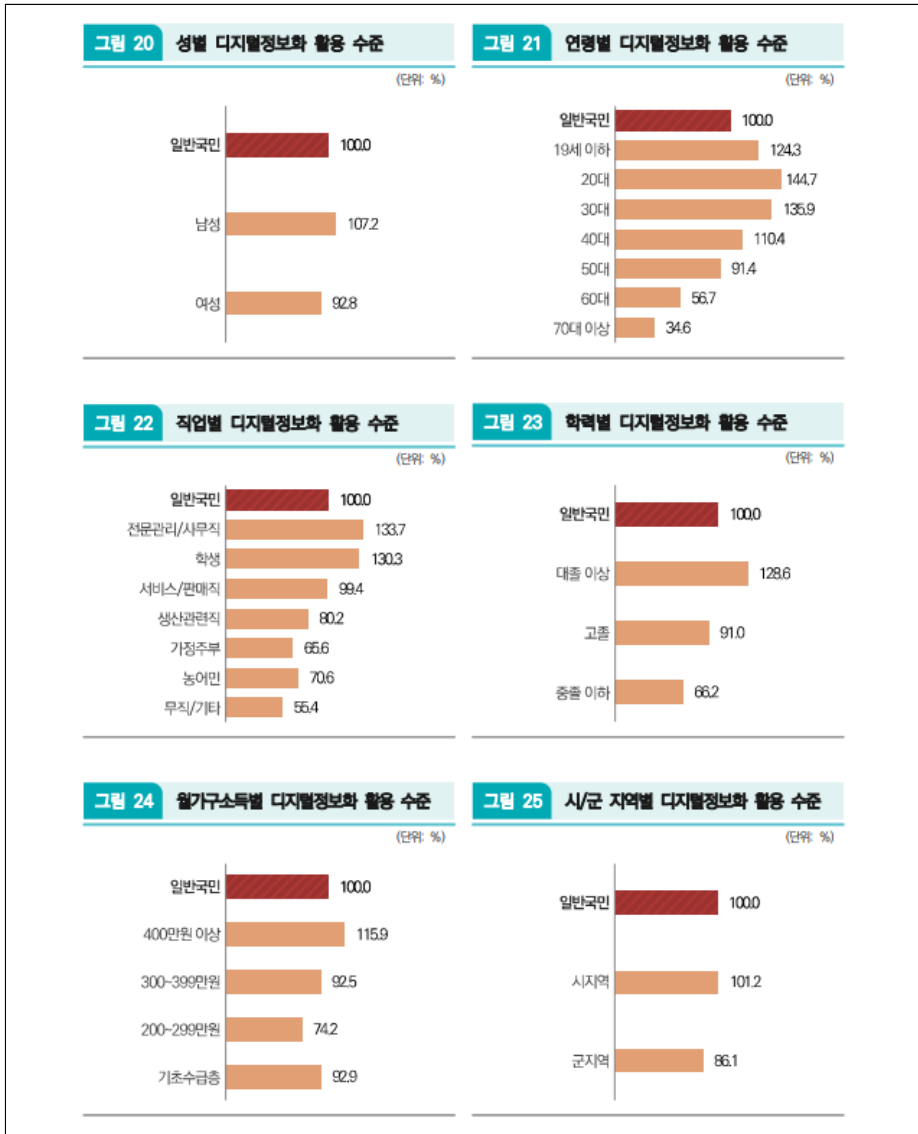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100%) 대비 많게는 69.9%(고령층) 적게는 95.6%(저소득층) 수준으로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2%로 2021년 75.4% 대비 0.8%p 상승하였다. 각 수준은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 국민 대비 4대 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의미한다. 부문별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은 96.0%, 디지털 정보화 활용 78.0%, 디지털 정보화 역량 64.5% 순이며, 수준 상승 폭은

4) 4차 산업혁명은 로봇(Rob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기술융합에 의한 사이버-실물세계(Cyber-Physical) 연계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기술혁명이다.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2020),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박영사, 17.

5) 윤정섭·손은정(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양극화, 「Future Horizon+」, 2021년 제3호(Vol.5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접근(1.6%p ↑), 역량(0.7%p ↑), 활용(0.4%p ↑) 순으로 나타났다.<sup>6)</sup>

[그림 2-3]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sup>7)</sup>



소득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38.

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45.

## 라. 인문학의 사회적 수요

인문학은 인간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중심적인 분과 학문은 문학, 철학, 역사 등이 있다. 인문학을 통해 인간의 의식, 감정, 욕망 등이 담긴 학문적 연구 결과들을 탐구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문학, 역사, 철학 등의 연구 성과를 통해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들이 무엇이고, 과거의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탐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인류가 고민해 온 문제들에 대응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현대에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삶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사고력, 창의력, 논증력 등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기대 효과로 인하여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된 평생교육사업은 인문교양교육 영역이 96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sup>8)</sup>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주요 사업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의 경우 2021년에 406개 도서관에서 4,972회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총 111,295명이 참여하였다. 도서관 지혜학교 14,347명,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155,407명,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20,839명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인문학에 대한 수요는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인문정신문화정책 수요에 대한 인식을 일정 정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서 일반 국민 60.5%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심리적 변화로 인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 상황 혹은 코로나 이후 사회심리적 변화로 인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필요성 증가'에 대한 문항에 60.5%가 '그렇다'(그렇다: 49.1% + 매우 그렇다: 11.4%)에 응답해 코로나19 이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심리 방역 차원에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계층별·세대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및 질적 변화에 따라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할 수 있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

8)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3), 「2021 평생교육사업 조사분석보고서」, 6.

9)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적 과제가 되고 있다. 베이비붐(baby boom) 세대<sup>10)</sup>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빠르게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사회적 고립감,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을 겪는다. 많은 노령인구가 정신적 질환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사회 참여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2. 인문정신문화 정책 현황

### 가. 인문정신문화 진흥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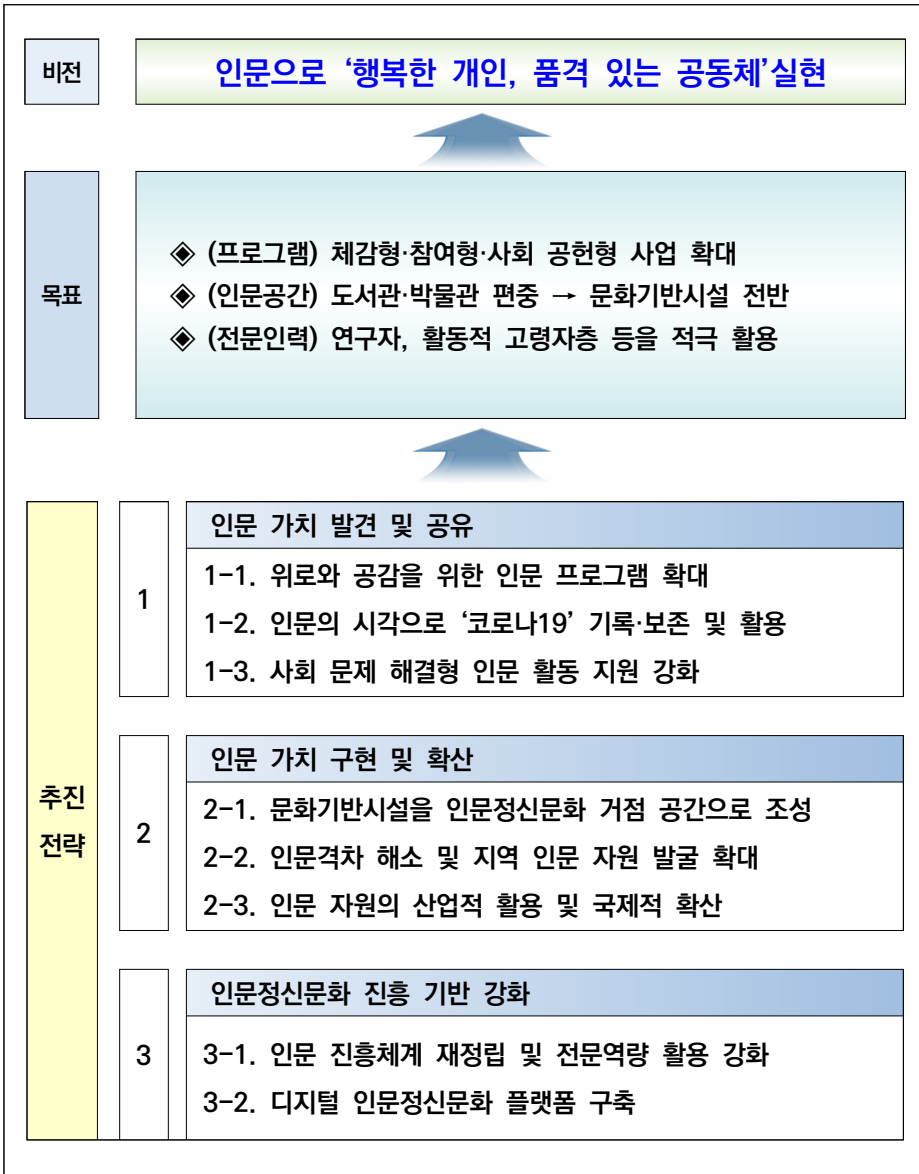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2016년 8월 4일 시행)에 따라 교육부와 함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하고, 2017년 법정 종합계획인 ‘제1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교육부의 인문학 진흥과 문체부의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공통 비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과 “인문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인문친화적 환경 조성”, “장기적으로 사회경제발전에 기여”라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정책을 집행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수, 프로그램 개수, 매개자 양성 수 등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의 양적 확대를 우선적으로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2월 21일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하였다.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 있는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비전 달성을 위해 “인문가치 발견 및 공유”, “인문가치 구현 및 확산”,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강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8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8개 중점 과제는 ‘기초 인문진흥 프로그램 개발’, ‘인문프로그램 다양화, 융·복합화 추구’, ‘일상적 인문공간 마련 및 지역 문화시설 활용 촉진’, ‘문화기반시설 매개역량 강화와 민간 매개역량 확대 지원’, ‘인문정신문화 콘텐츠 개발 보급 확대 지원’,

10)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부머 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등한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둔화되는 1963년까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임.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적극 대응’, ‘인문진흥 민간 공급 지원’, ‘인문진흥 정책 조사연구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표 2-1〉 제2차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 개요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하에서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수, 프로그램 개수, 매개자 양성 수 등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기반으로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 계획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사회적 기여에 대한 강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제공 시설 다양화와 확대 등을 추진하며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들의 내실화와 확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나.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예산과 신규 사업 확대 지속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 계획에 기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까지 1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해 왔으며, 2022년에는 182억 원대 예산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예산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2-2〉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사업 예산 현황(최근 3년간)<sup>11)</sup>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	2021	2022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6,621	16,911	18,281
① 길 위의 인문학	11,999	11,499	12,499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6,799	6,799	6,144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3,000	3,000	3,000
-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1,700	1,700	1,700
- 지역 인문자원 발굴 및 지원	500	-	-
-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	-	655
- 우리가지 인문동행	-	-	1,000
② 인생나눔교실 운영	3,300	3,300	3,300
③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	972	972	972
④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50	100	70
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300	300	300
⑥ 디지털 인문뉴딜	-	740	1,140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소외계층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인문교실, 중소기업 재직자 인문프로그램 지원, 인문총서 제작지원, 시민협업프로젝트,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우리가지

11) 2022년 예산안 문체부 문화정책관 예산 설명 자료 발췌 편집

인문동행 사업, 인생나눔교실 사업하에 멘토 양성교육, 우수사례 발굴·지원 등의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표 2-3〉 2022년도 인문정신문화 신규사업 세부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세부 사업명	소요 예산	비고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800	
- 인문교육콘텐츠 개발	269	
- 방과 후 인문교실 지원	205	신규
- 중소기업 재직자 인문프로그램 지원	63	신규
- 인문총서 제작 지원	155	신규
• 인문실험 공모전	545	
-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	240	
- 시민 협업 프로젝트 지원	180	신규
-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655	신규
- 우리가치 인문동행(찾아가는 인문강좌)	1,000	신규
• 인생나눔교실 운영	3,300	
- 인문 멘토링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운영	2,000	
- 기획사업 운영	550	
- 멘토 양성 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750	신규

이처럼 예산과 신규 운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속에서 사업 운영 체계의 개선과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들의 관리체계를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 제2절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체계 현황과 문제점

### 1.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체계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은 인문정신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국민에게 위로와 공감,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 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로움, 세대통합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한복·한지 등의 전통문화 중심 인문프로그램 구축·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 중인 ‘인문정신문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창출하는 사업이다.<sup>12)</sup> 이러한 인문정신문화사업은 인생나눔교실,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인문360), 디지털 인문 뉴딜,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우리가치 인문동행,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다양한 전담 기관들에<sup>13)</sup>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문정신문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여,<sup>14)</sup> 정책 집행 주체인 정부가 재원을 동원

1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3조(정의)에서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하며,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된 학문 분야를 말하고,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출처: 법제처).

1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18조(전담 기관의 지정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14) 이러한 정부 활동은 크게 정부가 재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방식과 공권

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추진하는 체계를 인문정신문화사업 추진 체계라고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인문정신문화사업 추진 체계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집행수단(policy instrument), 즉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구체적인 도구(tools)나 기술(technology)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수단의 의미를 정책목표와의 관계적 속성에서만 찾기보다는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하나의 ‘제도’로 바라보고,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수단을 하나의 제도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거래 방식을 규정하고 가치의 배분 방식을 달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프로그램들은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가 여러 사업들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년부터 인문전담기관을 맡으면서, 2023년 현재 인생나눔교실,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인문360), 디지털 인문 뉴딜,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우리가치 인문동행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작년까지 인문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올해부터는 인문전담기관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지만, 별도 사업을 맡아 수행한다.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 한국박물관협회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을 맡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표 2-4〉 인문정신문화 사업별 주요 내용과 담당 기관

번호	프로그램명	내용	담당기관
1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거점의 인문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문학의 일상화·생활화</li> <li>○ 강연과 탐방을 결합한 인문학 강연프로그램 운영</li> </ul>	한국도서관협회
2	도서관 지혜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심화 과정으로 지식 전달 위주의 강연 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 토론, 연구모임, 과제 수행 등 단계별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li> <li>○ 권역별 국립대학 및 국공립도서관 연계하여 운영</li> </ul>	한국도서관협회

력을 토대로 시장에 개입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인문정신문화사업은 전자에 해당된다.

번호	프로그램명	내용	담당기관
3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거점의 인문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문학의 일상화·생활화</li> <li>○ 인류문화유산에 내재된 인문 가치 공유</li> </ul>	한국박물관협회
4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시설 거점의 인문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문학의 일상화·생활화</li> <li>○ 지역 생활문화시설과 인문전문가, 청년이 모여 창의적 인문 활동</li> </ul>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휴양지, 국립공원, 지역 축제, 테마파크 등 방문객이 많은 여행지 거점의 인문프로그램 운영</li> <li>○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문 여행 프로그램</li> </ul>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	우리가지 인문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 포용, 치유를 위한 찾아가는 인문 프로그램</li> <li>○ 수혜 대상: 의료분야 종사자, 사회복지사, 소방관, 경찰관, 사회취약계층, 인구소멸지역 거주민 등</li> <li>○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로 12~14개 프로그램 진행</li> </ul>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문·문화 프로그램 운영</li> <li>○ 청소년의 연령, 수요 시설 이용 양상 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li> <li>○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및 장기 책임 운영을 통한 청소년 인문교육의 지역별 거점 구축</li> </ul>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8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중장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인문 프로그램 운영</li> <li>○ 중장년내일센터의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해 중장년을 위한 문화·고용 복합 공간으로 활용</li> </ul>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9	인생나눔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배 세대(멘토봉사단)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세대(멘티)를 만나 인문적으로 소통하며 관계 맺기</li> </ul>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 (인문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콘텐츠 전용 플랫폼 운영</li> <li>○ 인문콘텐츠 제작 및 축적을 통한 인문콘텐츠 아카이브 구축</li> <li>○ 인문콘텐츠 큐레이션 제공</li> <li>○ 인문정보 및 사업 통합 홍보 활용</li> </ul>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	디지털 인문 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발굴 활성화</li> <li>○ &lt;인문네트워크&gt;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통한 디지털 인문 연결 확산</li> <li>○ &lt;인문네트워크&gt;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인문 사업 참가 및 학습관리 지원</li> </ul>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현재 사업 수행기관들의 담당 사업들은 위와 같지만, 이전에는 관련 사업들의 수행 기관이 변동되는 경우가 흔했다. 예를 들어 지혜학교의 경우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한국도서관협회로 넘어간 경우이며, 이전에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어 사업이 진행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사업이 분산되어 있고, 사업 수행 기관의 변동이 상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성과관리도 각자 기관에서 알아서 수행하는 구조로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 2.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석

본 보고서는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 추진 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향후 발전 방향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수의 자문 의견을 구하였고, 추진 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식조사를 시행하였다.

### 가. 조사 개요

#### 1) 전문가 자문 의견

우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현재 문체부의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여러 의견을 구하였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구하였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사업 수행기관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유도하기 위해 익명으로 기술하였다.

〈표 2-5〉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대상	한국도서관 협회 팀장 2인	한국문화예술회원회 팀장 1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팀장 1인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문화예술회육진흥원 본부장 1인	지역문화진흥원 부장 1인
내용	인문사업 현황 전담기관역할에 대한 의견 지역인문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의견	인문사업 현황 전담기관역할에 대한 의견 지역인문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의견	인문사업 현황 전담기관역할에 대한 의견 지역인문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의견	인문사업 현황 전담기관역할에 대한 의견 지역인문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의견	지역인문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의견	기관 설립 과정에 대한 의견 지역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	기관 설립 과정에 대한 의견 지역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
일시	2023. 03. 31.	2023. 04. 05.	2023. 04. 15.	2023. 04. 20.	2023. 05. 08.	2023. 05. 09.	2023. 05. 09.



## 2)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조사는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의 역할, 지역별 인문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의 개선·확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및 전화 조사 병행
유효 표본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 총 269명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 - Punching -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 SPSS 21.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7월 4일 ~ 7월 17일
조사 기관	(주)글로벌리서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현행 사업 수행체계하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	예산 배정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양성 어려움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인문 프로그램 실행 시설의 부족 인문 프로그램 사업 수행 인력 부족 및 충원의 어려움	인문정신문화 사업 중복 사업 모니터링이 어려움 인문사업관련 연구 진행이 어려움 인문전담기관 역할 수행이 어려움 기관 간 정보교류 부족 수행사업의 변동과 잦은 이관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 추진 체계 발전을 위한 중요 요인	인문정신문화 정책 예산 확대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프로그램 개발 능력 강화와 신규 프로그램 지속 개발 인문 프로그램 실행 시설 확대 관련 연구역량 강화 사업 기획 조정 역량강화	인문사업만 수행하는 기관 신설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 지정 기간 확대(3년 → 5년) 네트워크형 사업 체계 형성 및 강화 온라인 포털 서비스 강화 인문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인문관련 자료 아카이빙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 역할 수행의 중요성	예산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프로그램 개발 기능 전담 시설 확보 정책 개발 및 건의 기능 정책 조율 기능 민간 사업 지원 및 모니터링 지역 단위 사업 개발 지원	온라인 포털 서비스 운영 사업 성과 관리 강화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강사 관리 및 지원 우수 프로그램 관리 및 공유 국내외 교류사업 기획 및 시행 홍보사업 기획 및 운영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담기관 사업 운영 예산 확대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 단위 개발 지원 온라인 포털 서비스 운영

항목	내용	
요인	인문 프로그램 개발 기능 인문 프로그램 전담 시설 확보 정책 개발 및 건의 기능 정책 조율 기능 민간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강사 관리 및 지원 우수 프로그램 관리 및 공유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 및 사업기관 운영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 운영 형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위해 지역별 인문 사업기관 지정 및 운영 필요 정도	
지역별 인문 사업에 필요한 운영 방식	지역 대표 도서관 중심 운영 지역 문화재단 중심 운영 지역별 직영 공공센터 신설 운영 민간 중심 네트워크 구성 운영	지역 대학 위탁 운영 지자체 자체 운영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 통합공모 형태로 지자체 운영

## 나. 주요 조사 내용

### 1) 전문가 주요 자문의견

#### ① 사업 수행 시 어려움

우선,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의 사업수행기관들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의견이다. 사업관리인력, 인력관리인력 등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관련 인력을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2023년 인문전담기관이 변경된 데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였다.

두 번째, 인문 사업에서 신규 사업들이 단기간에 많이 늘어나면서 사업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났다. 기존 사업과는 다른 대상과 지역 그리고 콘텐츠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 관리 요소들이 등장하였는데, 단기간에 대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세 번째, 각 사업수행기관들이 모두 고유목적사업이 따로 있어서 기관 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인력이 부족한데도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우선 투입되어야 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힘들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네 번째, 전담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인문전담기관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 수행기관과 차별화되는 기능과 역할을 한 적이 없었다. 타 기관이 수행하지 않는 인문사업들을 수행만 해 왔다. 타 기관 사업을 모니터링하거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인문사업 관련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왔다.

다섯 번째, 정책 기조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계획에 없던 신규 사업

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변경하라는 요구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속에서 사업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리고 문체부의 기조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에서 새롭게 만든 신규 사업을 타 기관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허탈한 경우가 많았다. 인문전담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사업 수행기관들의 사업이 수시로 변경된다는 인식도 있었다.

## ② 현재 전담기관 역할과 현황

문체부 인문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기관은 정책건의나 기획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지 않았다. 사업 수행기관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문전담기관에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다. 2022년도부터 인문사업 수행기관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인문 사업 수행기관 간의 교류나 협의가 거의 없었다. 그동안 인문 사업의 전체적인 조율, 조정 기능이 미비했었다. 개별 사업들이 별개로 진행되는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담기관으로서 기획이나 의견 개진 기능이 가능하나, 기관 내에서 관련 의사결정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 기관별 고유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문 사업만 놓고 관련한 건의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 인생나눔교실 사업으로 처음 맡아 시작하였으나, 문체부와 사업운영팀이 협의해서 주요 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이 없었다. 현재 인문전담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 부서 단위, 본부 단위 사업으로 진행하기 힘든 구조이다. 내부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인문전담기관으로서의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 2023년도 올해 처음 전담기관 지원예산이 배정되었다. 인문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 사업 중 몇 가지 사업을 담당하며 관련 사업예산만 배정받아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다.

## ③ 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우선, 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대한 모니터

링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책 전반·예산·기획 등의 업무는 문체부가 담당하고, 기획·조정 업무는 전담기관이 담당하고, 기타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만 하도록 하는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체부와 전담기관 간의 ‘기획·조정’ 기능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전담기관의 기획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와 자문위원회의 효과적인 구성과 활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담기관에서 사업 관련 정보[사업 주체, 참여자(수강생, 강사), 사업 결과, 사업 내용, 사업 평가, 선정 및 시행 등이 파편화되어 관리됨]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 사업이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네 번째, 인문사업이 인문전담기관의 본예산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예산으로 편성되어야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섯 번째, 인문전담기관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여섯 번째, 장기적으로 사업을 맡아 수행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담기관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는다면, 현재 3년 주기 전담기관 재지정 체계를 수정하여 5년 주기 재지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전담기관이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로 관련 연구와 확산사업, 기획조정업무, 온라인 포털 구축 및 운영, 강연 관련 정보 공유 앱 개발 및 운영, 홍보, 사업 개발 기능 등이 제안되었다.

#### ④ 전담기관 신설에 대한 의견

가능하다면 현재 사업수행기관 이외에 제3의 기관이나 신설기관이 인문전담기관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현 상태에서는 전담기관의 신설은 어렵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오히려 현행 전담기관 운영 시스템을 최대한 보완하고, 사업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인 후 이를 돌파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완전히 새로운 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관리할 사업의 수, 참여자 수, 사업의 효과 등이 기관 설립의 필요성으로 충분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관 신설 시에는 법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적 기반이 없으면 지역문화

진흥원의 어려움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단법인 설립의 형태로 진흥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나 담당자가 바뀌거나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사업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과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법인으로 시작해서 2006년에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2006년 8월에 법적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초기에는 문체부가 직접 사업을 하다가 기관 설립 작업이 진행되었다. 초기 3년 정도 기관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5~7년 차부터 안정화되었다. 초기에는 복권기금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추후 예술강사지원사업과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확대에 예산이 증가하였다.

○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과정

2016년에 생활문화진흥원으로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등장하였고,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진행했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분리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별도로 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진흥원은 민간기구인데 정부 사업 하는 (재)생활문화진흥원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21년 07월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었다(「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 3 근거). 이후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등 기타 사업들을 모아서 업무 영역을 확장해 왔다. 2017년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3년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다.

⑤ 지역별 인문전담기관 지정 · 운영

○ 기존 인문사업 진행 방식

문화체육관광부 기존 인문정신문화 사업들은 지역단위 사업은 진행하지 않아 왔다. 개별 사업수행기관별 공모나 용역업체 위탁운영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인문사업을 지역별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업으로 진행해 왔지만, 다른 사업수행기관은 지역 단위별 사업 수행이 없었다.

○ 지역 인문문화진흥센터 기능 가능성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역학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센터 사업과 연결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시군구별 기초 지자체에서도 지역학센터 설립 움직임이 있다. 지역 대표 도서관이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대학연구소들은 사업관리는 하기 어렵고 기초단위에서 기초 사업을 담당할 수는 있다는 의견이다. 지역단위 사업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문화재단에 직영 센터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 ○ 지역 인문체계 운영 방식

어떤 기관이 맡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민간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 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인문 체계 구축은 여러 기관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 인문체계 구축은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이 확보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교통, 온라인망, 유튜브 등으로 인해 지역에 인문 체계를 물리적으로 구축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거점 문화시설, 거점 대학, 시민 인문 기관, 관련 민간단체 및 법인 등이 네트워크 형태로 구축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 조정 등의 추세를 잘 고려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대표 도서관이 지역 인문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신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같이 존재한다.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과 사업의 신설이 필요하며, 예산을 주고 사업 운영 기관은 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알아서 정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시범 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제안하라고 해서 평가하고 센터로 지정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지역 기관 지정 운영보다는 학습포털을 잘 구축해서 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공유, 강사 관리, 강사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 지역 인문문화진흥센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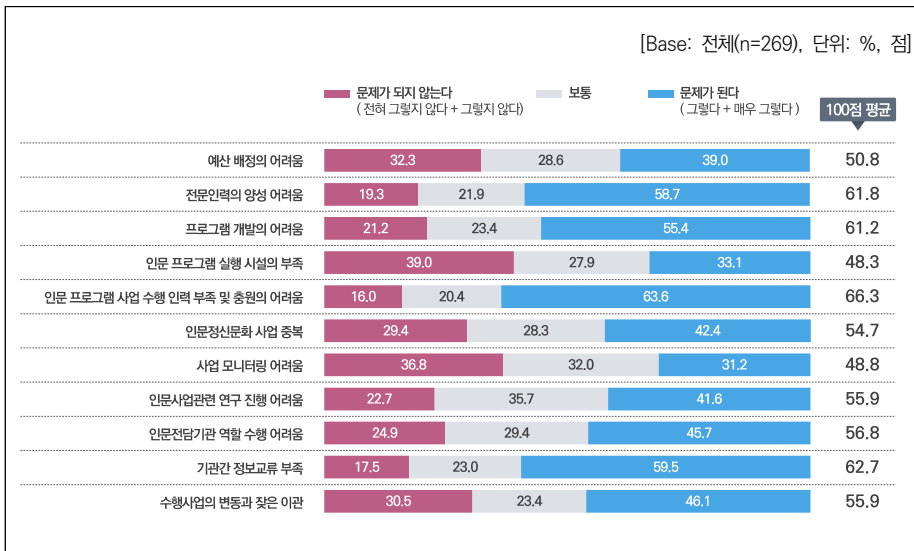
현재 지역에 인문 관련 활동이 많은데 실태조사나 관련 데이터 구축은 없다. 지역 인문문화진흥센터에서 지역 내의 다양한 인문 활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모니터링만 해도 큰 사업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기존의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한 사업들을 지역 단위로 구상하여 실행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 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① 현행 사업 수행체계하의 문제점

현행 사업 수행체계하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에 대하여 물었다. 가장 문제점으로 꼽힌 것은 ‘인문 프로그램 사업 수행 인력 부족 및 충원의 어려움’이다. 100점 환산 평균 6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기관 간 정보교류 부족’(평균 62.7점),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움’(평균 61.8점),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평균 61.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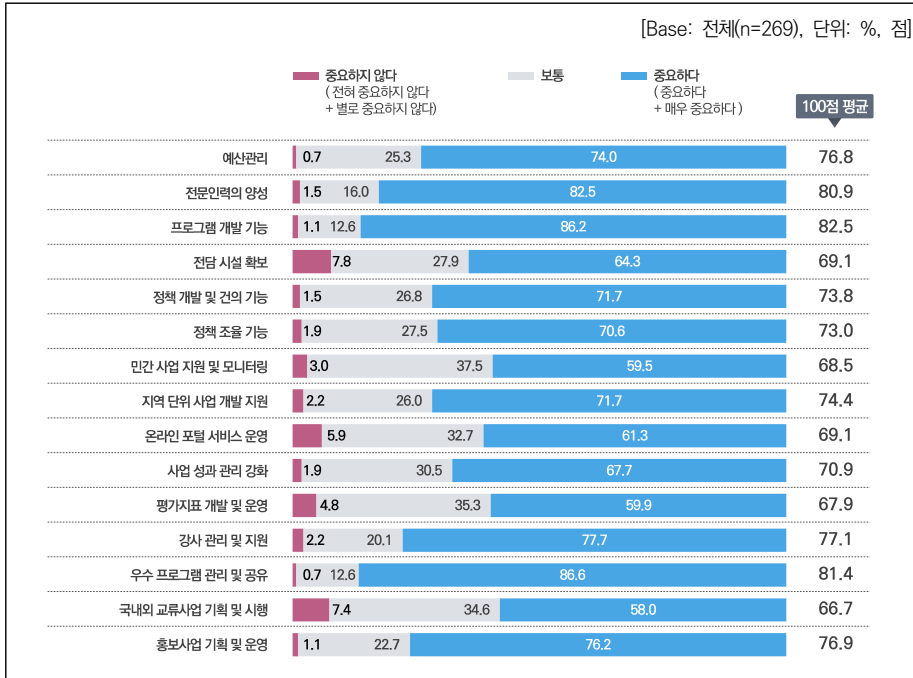
[그림 2-4] 현행 사업 수행체계하의 문제점



### ② 인문전담기관의 중요 역할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 중 중요 요인에 대하여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 기능’이라는 응답이 100점 환산 평균 8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수 프로그램 관리 및 공유’(평균 81.4점), ‘전문인력의 양성’(평균 80.9점), ‘강사 관리 및 지원’(평균 77.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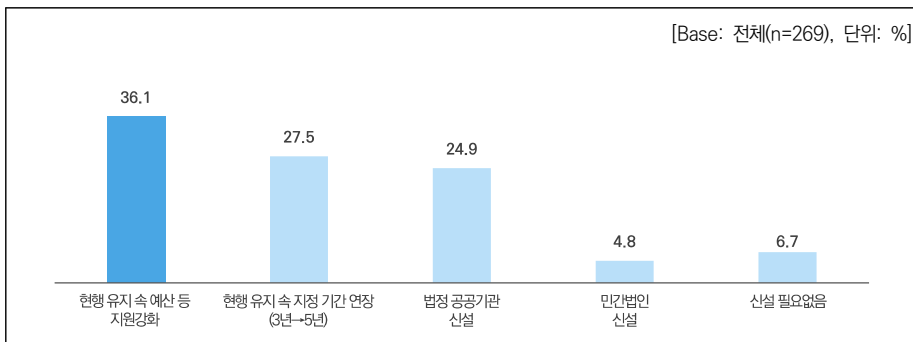
[그림 2-5] 인문전담기관의 중요 역할



### ③ 인문전담기관 운영 형태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 운영 형태에 대하여 물었다. ‘현행 유지 속 예산 등 지원강화’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행 유지 속 지정 기간 연장(3년 → 5년)’(평균 27.5점), ‘법정 공공기관 신설’(평균 24.9점), ‘신설 필요 없음’(평균 6.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인문전담기관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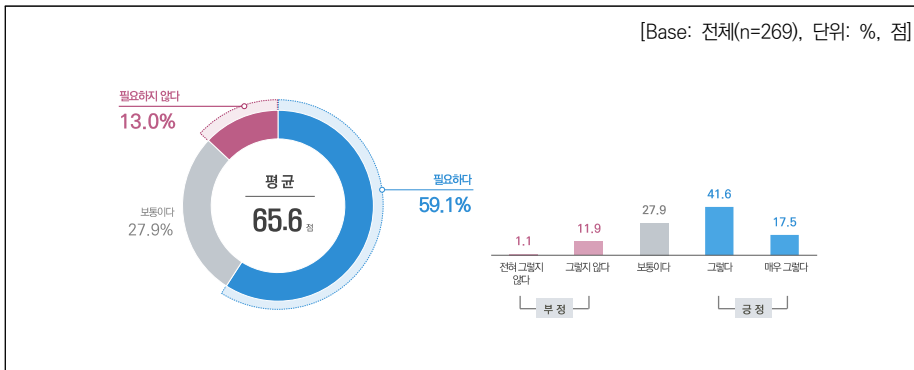




#### ④ 지역별 인문사업기관 지정 및 운영 필요성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위해 지역별 인문 사업 기관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긍정적인 응답이 59.1%(그렇다 41.6% + 매우 그렇다 17.5%)로 나타났다 (평균 65.6점). 그 뒤로 ‘보통이다’는 27.9%, ‘그렇지 않다’는 13.0%(그렇지 않다 11.9% + 전혀 그렇지 않다 1.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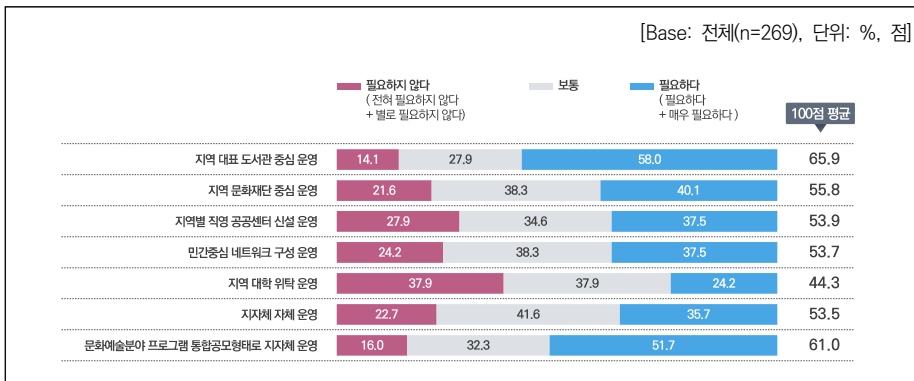
[그림 2-7] 지역별 인문사업기관 지정 및 운영 필요성



#### ⑤ 지역별 인문사업 운영 방식

지역별 인문 사업에 필요한 운영 방식에 대한 선호를 물었다. ‘지역 대표 도서관 중심 운영’이라는 응답이 100점 환산 평균 6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 통합공모 형태로 지자체 운영’(평균 61.0점), ‘지역 문화재단 중심 운영’(평균 55.8점), ‘지역별 직영 공공센터 신설 운영’(평균 53.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지역별 인문사업 운영 방식



## 제3절 소결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하여 다음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 ① 다수의 사업 수행기관으로 통합적 관리 어려움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프로그램들은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가 여러 사업들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년부터 인문전담기관을 맡으면서, 2023년 현재 인생나눔교실,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인문360), 디지털 인문 뉴딜,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우리가치 인문동행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작년까지 인문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올해부터는 인문전담기관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지만, 별도 사업을 맡아 수행한다.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청소년 인문·문화 프로그램,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 한국박물관협회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을 맡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이 분산되어 있고, 사업 수행 기관의 변동이 상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성과관리도 각자 기관에서 알아서 수행하는 구조여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2023년 민간보조사업 평가에서도 인문정신문화 사업은 관련 법이나 기본계획 설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근거는 명확하고 국민들의 인문정신문화 확산과 일자리 제공 및 문화적 실험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 등의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수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수의 보조사업자 및 다단계로 추진되고 있어 그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 운용 문제로 지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사업 규모 감축을 통해 사업자 정비와 다단계 추진 절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 ②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

전문가 자문 의견에서도,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면서 관리의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사업 수행체계하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에 대하여 묻은 결과, 가장 문제점으로 꼽힌 것은 ‘인문 프로그램 사업 수행 인력 부족 및 충원의 어려움’이었다. 현재 전담기관과 사업 수행기관들 모두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인력 부족 시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에 인력이 우선 투여되어, 인문정신문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인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③ 잦은 사업 변동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

사업 수행 담당자들은 사업 기획과 수행에 잦은 변동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정책 기조의 변경으로 계획에 없던 신규 사업을 갑자기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어렵게 만든 신규 사업들을 문체부의 기조에 따라 타 기관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허탈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어렵게 신규 사업을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 타 기관으로 사업을 이관해야 하는 경험을 한 경우, 새롭게 사업을 담당하게 되더라도 또 이전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사업 기획과 수행에 임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④ 전담기관 업무를 협소하게 운영

현재 인문정신문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할 때에도 인문정신문화 사업 전담기관은 지정 고시의 업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문정신문화 사업 전담기관은 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운영되어 왔고,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교류 사업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정책건의나 사업 수행 기관 지원 및 사업 모니터링 업무도 시행하지 못하였다. 전담기관이라고는 하나 별도의 운영예산은 없이, 사업 관련 예산만 배정되어 사업 수행 연관 업무(홍보,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등)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수행기관들은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업무들

만 수행해 왔고, 인력운용 또한 최소한의 정규직 인력 투입과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만 수행하였다. 따라서 홍보, 사업 평가, 정책 건의, 교류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필요한 부분을 시기별로 필요에 따라 단기로 수행을 하든가, 별도의 외부 용역을 통해 해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문정신문화정책 성과 측정·관리의 어려움, 전담 기구 부재에 따른 안정성 미확보, 미래 문화정책 수요 증가에 대비한 체계 개선 부족 등과 같은 인문정신문화사업의 추진 체계가 지니고 있는 여러 특성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제3장

행정 추진 체계 논의와 사례 분석



## 제1절 행정 추진 체계의 개념

### 1.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

#### 가. 정책수단에 관한 개념과 특성<sup>15)</sup>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정책도구(policy tools), 또는 통치도구(governing instruments)는 정부 또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로, 정부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 또는 장치(device)이다 (Howlett & Ramesh, 2003). 한편 Schneider & Ingram(1997)에 의하면, 정책도구는 공공문제 해결 차원에서 정책 대상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설계 요소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책수단은 정책집행주체가 정책이 의도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궁극적으로 대상 집단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정책수단은 크게 직접제공방식과 간접제공방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정부가 정부 인력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민간위탁, 보조금, 공기업 등과 같이 제3자인 중간전달자나 최종수혜자에게 재원을 지원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규제, 세제, 행정지도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촉진 또는 억제하기도 한다.

먼저 직접제공방식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인력을 직접적으로 동원하여 정책대상자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직접제공방식의 정책수단은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뿐만 아니라 부가되는 모든 재원을 조달하고 제공하는 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공공재(public goods), 외부효

15) 유민봉(2021), 권기현(2018; 2019), 남궁근(2017) 등에서 논의되는 정책집행, 정책수단 관련 내용들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과(externalities),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불완전한 정보(incomplete information)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윤리적 요인에 의해 정부에 의한 직접제공방식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러한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제공방식은 서비스 선택권의 제한, 자원 낭비 등의 X-비효율성, 생산성의 저하, 큰 정부에 대한 반감 등과 같은 다양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음으로 간접제공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바로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이다.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맡기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민간위탁을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출처: 법제처).<sup>16)</sup> 이러한 민간위탁은 정부가 직접제공방식의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고용과 인건비 측면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효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으며,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있으며(Denhardt, 1999), 다수의 경쟁입찰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고, 전문성 있는 외부기관의 신뢰도를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보조금(grant)과 지원금(subsidy)도 간접제공방식의 일환이다. 보조금은 정부를 대신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간전달자를 거쳐 지급되며, 지원금은 최종수혜자에게 바로 제공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무엇보다 보조금과 지원금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간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수행하는 경비는 교부금이라 한다.

한편 지원금은 최종수혜자가 개인인 경우 정부가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16) 법률구조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력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고, 개인이 필요한 것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 재난지원금, 바우처(voucher) 등이 지원금 방식에 해당되며, 정부에 의한 현물 제공에 비해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혀 수요자의 효용을 증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바우처제도는 때때로 시장경쟁원리를 확장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이점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간접제공방식에 해당되는 공기업 역시 정부를 대신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기업은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 비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관료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공기업을 직원 정원 50인 이상 그리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의 1/2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형 또는 준시장형으로 구분한다. 한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직원 50인 이상이면서도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출처: 법제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성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요구받으며, 설립 근거, 활동의 범위, 회계제도 등에 있어서도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또한 공기업은 정부 조직에 비해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긴 하지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임원 인사, 예산의 편성과 집행, 조직개편 등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정치권과 행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 나. 정책수단에 관한 구체적 분류체계<sup>17)</sup>

Hood(1986), Howlett & Ramesh(2003), Howlett, Ramesh & Perl(1995) 등의 통치자원 분류방식에 따르면, 정책수단은 조직 기반 수단, 권위 기반 수단, 자금 기반 수단, 정보 기반 수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조직 기반 정책수단

조직 기반 정책수단은 정부가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유형에 중점

17) 남궁근(2017)에서 논의되는 정책수단 관련 내용을 토대로 정리재구성하였다.

을 둔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뉴거버넌스의 등장은 서비스전달체계 내에서 행위하는 조직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야기하였다.

특히 뉴거버넌스의 핵심 중의 하나는 정책집행 차원에서 새로운 조직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다(Salamon, 2002; Salamon & Lund, 1989). 즉, 전통적으로 정부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기관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공기업 또는 공사, 민간부문 계약자,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등과의 다양한 유형의 조직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owlett & Ramesh(2003)는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공기업, 지역사회조직, 자원조직, 가족, 비정부조직(NGO), 시장조직 등의 다양한 유형의 조직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달리,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 내의 조직들을 통폐합하거나 그 조직의 유형을 바꿀 수도 있다.

#### ① 정부기관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기관이라는 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조직에 공무원들을 직접 채용함으로써, 정부재정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Leman, 2002; Howlett & Ramesh, 2003). 국방, 외교, 사회보장, 교육, 경찰, 소방, 국유재산관리, 인구총조사와 지질조사, 공원 및 도로 관리 등과 같은 서비스들이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복지국가로의 발전은 세계 각 국가에서 새로운 행정수요를 야기하였고, 상당수의 정부는 행정조직의 창설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비정부 행위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감독 해야 하는 방법보다 정보수집에 대한 요구가 적고, 많은 유형의 거래(transactions)들을 내부화할 수 있어 정책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관료제에 기반한 프로그램 집행은 신축성이 적어 비능률성을 초래하므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② 공기업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s)과 정부소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은 정부의 출자를 통해 운영되고 경영상의 책임을 지며, 정부는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민간기업보다 공기업 또는 정부소유기업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전국 곳곳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도 전기, 인터넷, 우편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통제 또는 규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이윤이 없을 경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은 단점이라 할 수 있다.

### ③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정부의 개입 없이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선단체, 비정부기구(NGO), 가족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조직, 자선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총량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총량보다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④ 시장조직 활용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시장조직 활용을 통해 수행하는 방법으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방식의 정부혁신 차원에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재산권 경매(property-rights auctions) 제도의 도입,<sup>18)</sup> 공기업 민영화, 민간영리회사와의 계약(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제공<sup>19)</sup> 등이 있다(Howlett & Ramesh, 2003).

### ⑤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 개편에는 정부부처의 조직개편, 정부부처 간 통폐합, 정부부처의 신설, 정부기능의 공기업화,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기관의 정부기관화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부부처 조직개편은 기존의 정책과정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부문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18) 재산권 경매(property-rights auctions) 제도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해총량제를 예로 들 수 있다. 공해총량제의 경우, 총량의 한도 내에서 공해배출권을 판매하며, 싱가포르의 시내 자동차 수 상한제를 채택하고 있고 자동차 소유허가권도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19) 정부는 민간위탁을 활용하여 민간영리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 정부기관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공급·제공 하던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제공 하는 방식이다(Salamon, 2002).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 학교급식 등의 다양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도소 기능까지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력, 재정과 함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렇듯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한다거나 기존의 조직을 재배치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정책결정 측면에서 의도적인 정부조직개편과 정부부처 인사행정의 변화가 지닌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Aucoin, 1997). 이러한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부처와 조정 기관 간의 관계, 부처 간의 관계, 부처 내 기관 간의 관계 등이 변화된다. 이러한 정부조직개편은 개편 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부처 통·폐합 시 정부 업무 추진 관련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정부조직 개편이 자주 시도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 2. 공공조직에 대한 개념 논의

공적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 관련 논의를 정리하여 향후 논의의 풍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가. 중간지원조직

#### 1) 중간지원조직의 출현과 배경

중간지원조직은 20세기 후반 사회적·경제적 체계의 질적 전환 과정 속에서 출현하여 성장해 왔다.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흐름 속에서 민간위탁(contracting-out)을 매개로 한 시민사회 진영의 비영리기구(NPO)들이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비영리지역단체(CBO)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업(예: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중간지원 조직들이 등장·발전 해 왔다(정병순·황원실, 2018). 오래전부터 중간지원조직은 미국, 영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에서 발전되어 왔는데,<sup>20)</sup> 국가별로 그 배경이 다양하다는 특성도 있지만, 이러한 성장은 무엇보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변화와 깊은 관

20) 미국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 IO)으로 지역단체의 효율성을 조정하는 형태에서 확장되었고, 영국은 지역개발기관(Local Development Agency),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조직으로서 공공서비스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일본에서는 비영리 기구(Non-Profit Organization, NPO)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개념이 구체화되었다(송두범, 2011; 김재현 외, 2013; 오단이·정무승, 2015; 류명희, 2019).

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1919년 전국사회서비스협의회의 출현 이후에 영국 정부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중간지원조직을 비영리기구들 간의 조정자로 인식하면서 중간지원조직들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1900년대 초반에 지역자선단체들의 만연한 중복 활동을 조율하기 위한 기구로 출현한 이래로 1980년대 전후로 활성화되었다. 유럽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주로 협동조합이 발달했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연합체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출현한 이래로 최근 들어서는 전문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중간지원조직은 1990년대 전후에 활성화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의 조직화된 자원봉사활동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출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봉사 및 공동체 영역의 성장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출현하였다. 사회서비스 공급을 효율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시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의 일환으로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최인수·전대욱, 2020).

## 2)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유형

통상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정책과 지역사회 또는 시민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라고 정의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쌍방향 혹은 다자적 관계에서 다른 조직들을 상호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Briggs, 2003). 이러한 조직은 기존의 전달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요들을 정책과 연결하고,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이 가능한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로서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활동을 촉진·지원 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고재경·주정현, 2012). 중간지원조직은 일반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서비스 내 다양한 유관 기관 간의 교류나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하나의 조직이라 정의되며(김재현 외, 2013), 미시적인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필요성을 조정·중개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송두범, 2011; 김재현 외, 2013; 고경호·김태연, 2016; 류명희, 2019).

중간지원조직은 정부·기업과 시민사회의 중간, 때로는 민간과 민간의 중간 등 최소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주체 사이에 위치하며, 존재의 근거는 각 주체의 필요성과 상호 공유된 필요성에 기인한다(김태영, 2016).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은 양자적, 다자적 관계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매개조직, 중개조직, 연계조직, 연결조직(bridging organiz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Argote, 2012; 2013). 이러한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중간지원조직은 연계·협력·조정 기능과 역할,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교량자(bridger)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중간지원조직은 각 주체들이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지원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촉진한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은 개별 주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며,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계된 개별 주체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자원지원, 역량강화, 정보제공, 연구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은 다른 기능을 지닌 조직과의 연계·중개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 새로운 상호작용 구조를 양산하는(양용희, 2013) 등 양자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질 때에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낸다(박세훈·임상연, 2014).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은 연결과 지원을 통해서 다른 기능을 지닌 조직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 창출을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briggs, 2003). 한편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지원조직이 연계를 맺고 있는 조직들이 가지지 못한 독자적인 역량과 그 역량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합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김기태, 2019; 김태영, 2016).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Donahue & Zechkauser, 2006), 문화예술,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sup>21)</sup>

21)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기업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와 사회적 기업 사이를 조율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정수화, 2011), 마을공동체 사업 측면에서는 주민참여, 공동체의식 강화 등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수립하고,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하면서 주민교육을 통해 지속력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마을의 새로운 가치 창출(환경, 문화 등의 활용)을 위해 이해관계자 사이를 조율·중재 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중간의 위치에서 중재, 매개, 조율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창진, 김종래, 2022).

중간지원조직은 운영주체별로 관 주도형, 민간 주도형, 위탁형으로 구분된다(지식경제부, 2011).<sup>22)</sup> 먼저 관 주도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예산의 확보가 안정적이지만 기관장이 이끄는 운영 방향과 가시적인 성과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민간 주도형은 민간의 설립과 운영 방식을 토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업의 운영이 관 주도형에 비해 유연하지만, 예산의 확보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위탁형은 정부나 행정기관이 설립은 하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예산의 확보가 안정적이고 사업 운영에도 유연성이 있지만, 운영주체의 역량에 의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요구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은 민간과 민간의 중간, 시민 사회와 정부의 중간에서 양자 또는 다자를 매개·중개·연계·연결 하는 조직의 관점에서 문화정책 또는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문화 관련 조직들 사이의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와 민간단체, 민간단체와 민간단체 사이에서 연계·협력·조정, 교량자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거버넌스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김보람·최정민, 2017).

## 나. 준정부 조직

준정부 조직은 좁은 의미에서 법적인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광의로는 정부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위에서 정부의 일을 대신하는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이를 공공기관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보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47개로서 구체적으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260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임직원 정원은 2023년 약 44만여 명이며, 부채와 자산 규모는 각각 약 670조 원, 1,055조 원에 달한다.

### 1) 공공기관 유형

한국에서의 공공기관 유형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22) 중간지원조직은 운영주체별 외에도 운영구조에 따라 컨설팅형, 연합체형, 컨소시엄형, 그룹형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활동 영역에 따라서는 협력형, 옹호형, 자원중개형, 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되고,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는 종합지원형과 특화분야형으로, 공간적 범위로는 광역형과 지역형으로 분류된다(최인수·전대욱, 2020).

첫째로 공기업이란 직원 300인 이상, 총수입액 200억 원 이상, 자산 규모 30억 원 이상 이면서, 자체수입비율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정부가 지정 한 기관을 의미한다. 둘째로 준정부기관이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정부가 지정 한 기관을 말하며,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닌 기관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한다.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기관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조성된 공적 인 자금이 정해진 공공의 목적에 맞는 곳에 쓰이는 것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 기관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각종 국책연구소, 위원회, 재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특히 국책연구원은 47개(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25개 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2개 연구원)가 있다.

〈표 3-1〉 공공기관 분류 기준

유형	분류 기준
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정원 300인 이상</li> <li>- 총수입액 200억 원,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li> <li>- 자체수입/총수입<math>\geq</math>50% (기금관리기관은 <math>\geq</math>85%)</li> </ul>
① 시장형	자체수입/총수입 $\geq$ 85%,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②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정원 300인 이상</li> <li>- 총수입액 200억 원,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li> <li>- 자체수입/총수입<math>&lt;</math>50% (기금관리기관은 <math>&lt;</math>85%)</li> </ul>
①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관리(위탁 포함)하는 기관
②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처: 알리오플러스 <https://www.alioplus.go.kr/organization/organByPub.do>

〈표 3-2〉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현황<sup>23)</sup>

구분	(주무 기관) 기관명
준시장형 공기업 (1)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1. 30.),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중 일부 내용 편집



구분	(주무 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8)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2) 비법인 공공기관

비법인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행정조직 형태로는 해결할 수 없어 생겨난 파생 조직이다. 행정수단이 과거의 단속 위주였던 강제적 방법에서, 현재는 자율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해졌다. 이 기관들은 보통 심사조정기관들로서 \*\*\*위원회, \*\*\*원, \*\*\*평가원, \*\*\*심사원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에서 내부조직으로 있다가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다. 이들 중 법적 지위가 법인이 아닌 기관들이 있어 비법인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직원들의 신분은 민간인이나 업무는 행정처분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공무원 인사행정에 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3-3〉 심사조정 기관들

구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저작권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담당 분야	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의료분쟁	언론분쟁	소비자분쟁	금융관련 분쟁	저작권 관련 분쟁	주탁하자 관련 분쟁
근거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주택법
설립 연도	2008년	2012년	1981년	1987년	1999년	1987년	2009년

### 3) 법정협회

법정협회는 민간협회나 조합 중에서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도록 법률에 정해진 조직이다.<sup>24)</sup>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기능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법정위탁이라 한다. 즉 정부조직이 행정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아웃소싱하는 것이지만, 특정 협회가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법정협회에 위탁되는 업무는 정부기관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정부조직의 비대화가 우려되고, 실제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들이다.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자를 지정하는 지정위탁, 법정 위탁, 계약 체결에 의한 민간위탁 등 세 가지가 있다. 지정위탁은 수탁자를 법령에 의하여 정하되, 이 중에서 적격자를 지정하는 것이고, 법정 위탁은 법에 의하여 특정 업무를 특정 수탁자에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 계약 체결에 의한 민간위탁은 이런 수탁자에 관한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민간위탁을 경쟁위탁, 법정 위탁, 수의계약 지정고시, 기타 등으로 5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

24) 김정숙(2019), 법정협회의 유형에 관한 연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적용하여, 「한국행정학보」, 제53권 1호, 65-94.

## 제2절 행정 추진 체계 사례 연구

행정 추진 체계의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행정 추진체계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영역이 아닌 타 부처 행정 추진체계 사례 연구는 직접운영방식, 공공·민간위탁 운영 방식, 공기업(공공기관) 운영 방식으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1. 직접 운영방식 사례

#### 가. 방위사업청

##### 1) 배경 및 필요성

방위산업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 하는 업”이다(「방위사업법」 제3조 제8호). 이에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며, 대규모 투자 등 첨단기술이 집약·융합 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1970년대 초반 심각한 안보 불안의 상황에서 정부는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개발하였으나, 산업의 특성상 보호와 통제 강화에 기반해서 기술개발 촉진 저해, 비리 확산, 경쟁 제한으로 인한 기술 등의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었다(이왕태, 2018). 이에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가의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국방획득의 분야에서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방부, 합참, 각 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 운영되던 획득 관련 조직 및 기능을 통폐합하여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획득 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을 마련하였다(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2) 설립 근거 및 연혁

방위사업청은 2005년 7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 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에 2005년 12월 「방위사업법」 제정을 통해 2006년 1월 본격적으로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졌다. 1973년 마련된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9년 「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된 이후, 33년 만에 변경되어 방위사업청이 마련되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 3) 업무 범위 및 주요 사업 내용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3-4〉 방위사업청 주요 업무

구분	주요 내용
기획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 내 주요 정책 기획 및 관리</li> <li>- 방위력개선 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li> <li>-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예산결산 수행</li> <li>- 안정적 방위사업 정보화 체계 구축</li> <li>- 소송 및 행정·성과 관리</li> </ul>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산수출진흥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li> <li>- 수출기업 지원</li> <li>- 방위력개선사업, 방산수출입 관련 국제협력관계 관리·발전</li> </ul>
방위사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득제도 개선</li> <li>- 방위력개선사업 선행연구 및 단계별 분석평가 업무수행</li> <li>-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강화</li> <li>- 획득환경 변화에 맞춘 국방규격 체계 개선</li> <li>- 방위사업 관련 계약제도의 수립 및 연구 발전</li> </ul>
방위산업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추진</li> <li>- 방위산업 금융지원 수립·추진</li> <li>-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및 일자리 창출</li> <li>- 철충교역 정책 수립 및 추진</li> <li>- 무기체계 품질관리 및 감항인증 관련 정책수립</li> <li>- 방산원가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li> </ul>
국방기술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기술 정책 수립 및 기술관리</li> <li>- 핵심기술개발 기획 및 조정·통제</li> <li>- 국방기술보호</li> <li>- 방산수출입허가</li> </ul>

구분	주요 내용
방위사업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법무 지원</li> <li>- 방위사업 주요 단계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승인</li> <li>- 방위사업 정보 수집</li> </ul>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감사</li> <li>- 청렴 반부패 업무 추진</li> <li>-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li> <li>- 옴부즈맨 제도 운영</li> </ul>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사업 관리 절차</li> <li>- 무기체계 획득의 효율적인 관리</li> <li>- 주요 업무 절차 마련</li> </ul>
계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제 계약 및 조달</li> <li>- 원가 관리</li> </ul>
방위사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li> <li>- 국내외 교육훈련 제도 기법의 연구 및 보급</li> <li>- 국방사업관리사 시험 주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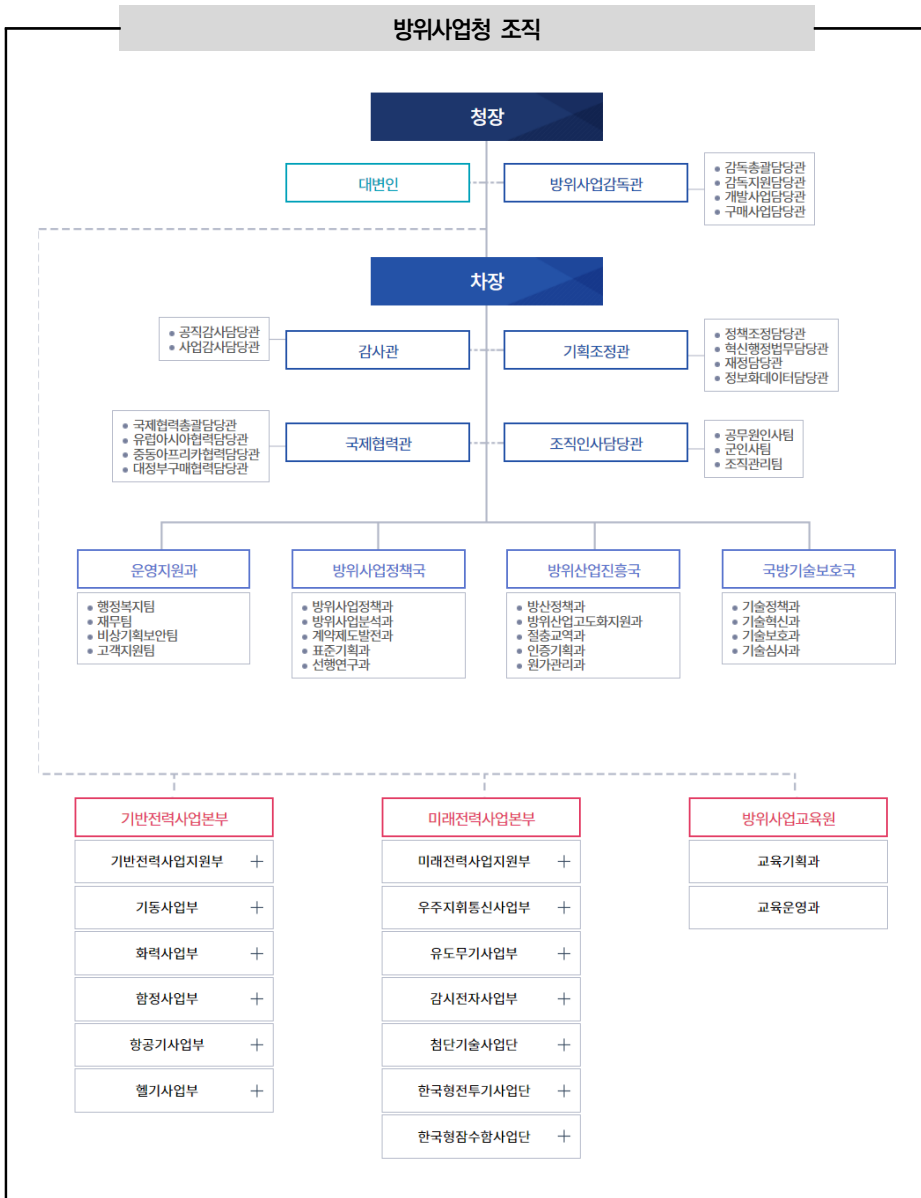
※ 자료: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접속일: 2023. 05. 05.)

방위사업교육 업무는 청장 산하 하부조직인 방위사업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기획(연간 교육계획 수립, 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운영(교육과정 개발 및 표준화, 교재개발 및 편찬, 방위사업교육과정 운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방위사업교육원 홈페이지).

#### 4) 조직구성 및 예산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방위사업청은 청장 산하 조직으로 대변인실과 방위사업감독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략사업본부, 방위사업교육원을 두고 있다. 또한 차장 산하 하부조직으로는 감사관, 기획조정관, 국제협력관, 조직인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산업진흥국, 국방기술보호국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3-1] 방위사업청 조직 구성



※ 자료: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접속일: 2023. 04. 13.)

2023년 5월 현재, 방위사업청은 405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를 통해 군인의 정원에 대해 576명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2023년 현재 일반회계 세입예산 3,319억 5,500만 원으

로 2022년 대비 2.73%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예산은 16조 9,071억 8,300만 원 규모이다(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분석통계).

## 5) 성과

방산 비리, 기술 개발 저해, 경쟁력 악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방위사업청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최근에는 K1E1전차 양산,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천검’ 개발,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K9 자주포 수출, 안무함·한산도함·마라도함·광개토대왕함·도산안창호함 등의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12월, 국방과학기술 수준 세계 9위에 진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027년까지 세계 7위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무기체제 획득 기간이 현재 12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2027년까지 5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신설 이래 방산수출의 성과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방위사업청 신설 당시에 3,200억 원 수준이었던 방산수출이 2020년 17.9조 원에 이르렀으며, 2027년까지는 40조 원의 방산수출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나. 재외동포청

### 1) 배경 및 필요성

2023년 6월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정체성 함양, 한국과의 연대 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재외동포의 규모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재외동포청 신설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재외동포는 약 750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sup>25)</sup>. 이러한 재외동포는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재외동포의 송금액은 약 22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 송금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재외동포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

25) 재외동포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재외동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71년 70만 2천 명의 규모에서 1975년 92만 명, 1980년 147만 명, 1985년 190만 5천 명, 1990년 232만 명, 1995년 522만 8천 명, 2005년 663만 8천 명, 2015년 718만 4천 명의 규모에서 2019년 750만 명의 수준에 이르렀다(외교부, 2019).

로 약 2,000여 개의 재외동포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연대 강화 등을 위한 전문 기관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경제활동 지원, 교육 지원, 문화활동 지원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2) 설립 근거 및 연혁

재외동포청은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의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년 설립되었다. 재외동포의 규모 증가와 관련 정책의 총괄 지원 등을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1997년 3월 「재외동포재단법」의 제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의 복수국적과 관련된 이슈에 의해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또 다양한 국가별·차별적인 이슈 등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부분에서는 재단과 관련 법은 한계가 있었으며,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재외동포청과 같은 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2022년 대선을 앞둔 윤석열 후보의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을 시작으로, 2023년,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 제30조<sup>26)</sup>에 근거하여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였다.

## 3) 업무범위 및 주요사업 내용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6) 「정부조직법」 제30조의 ③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재외동포청을 마련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④는 재외동포청에 정무직 청장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차장 1명의 규모로 운영함을 규정하고 있다.



〈표 3-5〉 재외동포청 주요 업무

구분	주요 내용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 대상 민원 서비스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의 운영 및 유지,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li> <li>- 영사정보화 및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li> <li>- 재외동포 민원실 및 콜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재외동포의 출입국, 사증, 국적, 병무, 국내 체류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li> <li>- 재외동포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li> <li>- 재외동포의 세무, 관세, 국내 고용 등 경제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li> <li>- 재외동포의 교육,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훈 등 사회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li> <li>- 그 밖에 재외동포 민원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li> </ul>
기획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청에 대한 민원사무 및 국민·자체 제안제도 총괄</li> <li>- 재외동포청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li> </ul>
재외동포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 및 소관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운영</li> <li>-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등 관계기관·전문가와의 협조</li> <li>- 재외동포의 포상 및 보훈에 관한 사항</li> <li>- 재외국민 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해외 거주지역별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국내 정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재외동포 지원·서비스 정책 이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사항</li> <li>- 영사 관계 각종 문서 공증·확인 및 인증,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li> <li>-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li> <li>- 재외동포정책 연구 및 재외동포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li> </ul>
교류협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재외동포·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li> <li>- 재외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련한 재외동포청 소관 사항</li> <li>- 재외동포 문화예술인·문화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차세대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해외 한인입양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재외동포 기업·경제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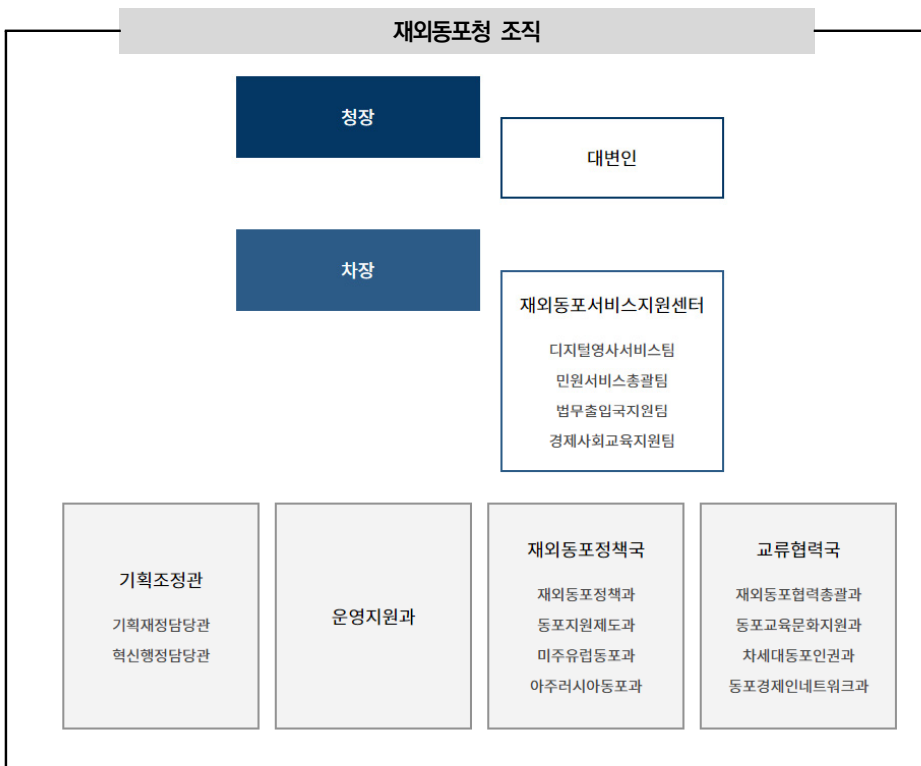
※ 자료: 「재외동포청 직제」, 대통령령 제33377호(2023. 4. 5. 제정)

재외동포청은 기획조정 및 운영지원의 스태프 부서 이외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서별로 〈표 3-2〉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4) 조직 구성 및 예산

재외동포청은 대변인실을 포함하는 청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3국관, 1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디지털영사서비스팀, 민원서비스총괄팀, 법무출입국지원팀, 경제사회교육지원팀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재외동포 시스템에서 담당하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국은 총괄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추진 등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정책과와 동포지원제도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별 구분에 따른 미주유럽동포과, 아주러시아동포과로 구분하고 있다. 재외동포 및 동포 단체 지원, 그리고 이들의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은 재외동포협력총괄과,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차세대동포인권과,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3-2] 재외동포청 조직 구성



※ 자료: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접속일: 2023. 06. 16.)

재외동포청은 2023년 신설되어 그 전에 해당 역할을 하던 재외동포재단의 예산과 업무를 흡수하게 된다. 2023년 재외동포재단은 63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

었으며, 인건비 52억 2천만 원, 경상비 19억 2천만 원, 사업비 559억 원 규모이다(재외동포신문, 2022. 12. 27.). 사업 내용별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이 108억 9천만 원, 한상(韓商) 네트워크 사업이 24억 8천만 원,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사업이 19억 1천만 원,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은 156억 4천만 원, 홍보문화 사업은 46억 2천만 원, 재외동포 교육사업 177억 4천만 원, 조사연구사업 9억 3천만 원, 재외동포 인권지원사업은 16억 9천만 원의 규모이다. 재외동포신문(2022. 12. 27.)은 재외동포사회의 세대교체 등 재외동포청의 신설 등과 같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육성 예산이 이전과 비교하여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5) 성과

재외동포청의 신설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외동포의 규모와 역량을 감안할 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의 필요성이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의 설립은 전 세계 각지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것,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문화, 언어 등을 홍보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해줄 것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다양한 측면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 시사점

정부조직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의 수립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조직이 거대화되고 예산의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환경의 변화에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의 대상이 쉽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운영의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방위사업청과 재외동포청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접운영방식으로 기관을 설립한 사례이다. 방위사업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

고 국가의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국방획득의 분야를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 합참, 각 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운영 되던 획득관련 조직 및 기능을 통폐합하여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획득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을 마련하였다. 정책, 산업진흥, 기술보호, 사업 감독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는 것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2,000여 개의 재외동포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연대 강화 등을 위한 전문 기관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설립되었다. 재외동포 대상 서비스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교류협력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효율성을 배가시켰다. 사업의 중요도와 관련 기관 설립과 집행의 효율성이 명확히 보일 때 직접운영방식의 기관 설립도 타당할 것이다.

## 2. 공공/민간위탁 운영방식 사례

### 가.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 1) 배경 및 필요성

2007년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한국 최초로 주거복지센터가 마련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강북구, 성동구, 성북구 지역에 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주거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10개 자치구(강북, 노원, 성동, 은평, 관악, 송파, 금천, 서대문, 영등포)에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의 주거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서울시는 2018년에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각 지역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였다.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확대되면서 각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양질의 균등한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의한 것이다(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 2) 설립근거 및 연혁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2018년에 서울의 전 자치구에 지역주거복지센터가 마련된 이후에 지역센터 간의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중앙주거복지센터가 마련되었다.

## 3) 업무 범위 및 주요 사업 내용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상담하는 지역센터와 차별적으로 지역센터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및 지역별로 주거복지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다음의 표와 같이 담당하고 있다.

〈표 3-6〉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업 내역

사업 내용
1. 법령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정보 제공·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정책개발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료: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자치구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를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우선, 서울시와의 관계에서는 서울시가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 예산을 지원하면, 이를 근거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DB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치구·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연계한 사업들을 지원하며, 이러한 정보와 환경을 토대로 하여

센터에서는 주거복지 교육, 주거복지 연계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서울 시민들에게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한 서비스와 사업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주거복지 교육, 정책 홍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된 주거복지 수요 DB에 근거한다.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에서도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요를 수렴하여 센터에 전달하며, 이를 근거로 상담원시스템, 주거복지 정기교육, 매뉴얼 제작 및 관리, 자원발굴연계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 4) 추진 구조 및 사업 방식

서울의 25개 자치구 지역센터는 2022년 3월까지의 민간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16개,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9개였으나, 이후 서울시에서 전 지역센터를 SH공사에서 위탁 운영 하게 되었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던 센터의 경우 SH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다시 민간법인·단체에 재위탁(제3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김강산, 2022).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7〉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센터 사업 내용

사업 내용
1. 법령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정보제공,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 관리
3.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4.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5.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
6.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8.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9.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료: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

#### 5) 조직구성 및 예산

2018년 6월에 설립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용산구에 있으며, 센터장, 팀장, 팀원 6명의 구성으로 총 8명의 규모이다. 연간 운영예산은 2022년 기준 약 7억 7천만 원이며, 지역센터에 교부하는 금액은 제외된 수준이다. 25개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총예산

은 2022년 기준 6,368,482천 원으로 센터당 약 2억 6천만 원 수준이다(김강산, 2022).

## 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 1) 배경 및 필요성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고, 현재까지 약 20년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당시 국가적 경제위기하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재정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확대된 사회복지자원 사용의 효과성 및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여 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의 당위성이 제기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시설 스스로가 평가과정 속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1a).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 및 운영기관이 변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담당하였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8〉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li> <li>2. 합리적 평가지표와 평가체계의 개발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틀 마련</li> <li>3.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에 대한 지역별·시설종별 차이를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의 균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li> <li>4. 사회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 및 보장</li> <li>5. 국민들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li> </ol>

## 2) 설립 근거 및 연혁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2는 시설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이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평가기준은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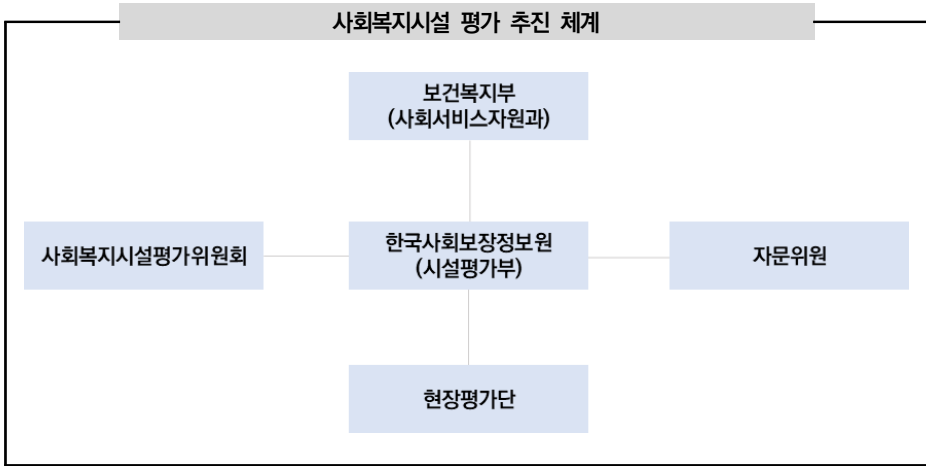
## 3) 업무 범위 및 주요 사업 내용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전문적인 시설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할 목적을 가진다. 또한 이와 함께 컨설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실시할 목적이다. 평가의 주요 내용은 평가지표의 개발, 평가준비 및 실시,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내용으로 구분되며,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부모공동생활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을 추진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17년 660개 시설, 2018년 80개 시설, 2019년 1,285개 시설, 2020년 1,745개 시설, 2021년 254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평가부는 시설평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2023년 평가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이에서는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외에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회는 평가계획 및 결과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고, 자문위원회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3-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2022년 기준) 체계



〈표 3-9〉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내용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 4) 조직 구성 및 예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전문위원 1명,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주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실시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결과와 데이터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시설 운영상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인 서비스품질관리는 2009년에 시작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이러한 역할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년부터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고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품질본부 내에 시설평가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10〉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전담 조직

시설평가부 역할	
부장	○ 시설평가부 업무 총괄
과장	○ 사회복지시설 평가 운영기획 ○ 시설평가 운영 전반 ○ 국회 및 외부 요구자료 대응 ○ 부서 주무에 관한 사항 ○ 차세대시스템 개발지원
대리3	○ 사회복지시설 평가 운영 ○ 실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 우수·개선시설 인센티브 관리 및 지급 ○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개발 운영 ○ 사전·사후관리(컨설팅) 운영 전반 ○ 시설평가 기관 사후관리 ○ 시설평가 지표개발
주임2	○ 시설평가 기관 사전 관리 ○ 시설평가 운영 및 시스템 관리 ○ 시설평가 지표개발 ○ 사회복지시설 평가 운영

※ 자료: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접속일: 2023. 07. 10.)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 사업은 2023년 3천2백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평가를 실시하던 2022년의 예산 3억 1천 5백만 원과 비교하면 약 89.8% 감액된 것이다(보건복지부, 2023b).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공개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 5) 성과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1b)에 따르면, 1999년부터 실시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관련 데이터와 정보가 축적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2009년부터 실시한 서비스품질관리 컨설팅이 2020년까지 약 540개소에서 진행되었다고 설명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관계, 시설 운영 전반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sup>27)</sup>,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서비

27) 1999년 95개(장애인복지관 36개, 정신요양시설 59개, 아동복지시설 28개, 노인요양시설 60개)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매년 추진되었으며, 2022년 12월 현재까지 총 15,809 개의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이루어졌다(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 [www.w4c.go.kr](http://www.w4c.go.kr)).

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방향과 내용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복지시설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도 큰 성과로 주목할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전문기관 및 조직을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1) 배경 및 필요성

2000년대 전후 급속하게 발달한 정보화, 인터넷, 과학기술 등은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기반에도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문서와 대면 중심으로 제공되던 행정서비스는 온라인, 비대면, 데이터베이스화 등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켰다. 사용자인 공무원의 편리성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명확·정확성, 신속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을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정 정보 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은 급속하게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행정자치부와 시도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 협력의 필요성이 증시되었으며, 지방간의 연계·협력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이에 업무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정보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자체 간의 정보화 사업 공동 추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정보화 정책의 환경 속에서 전문 싱크탱크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황선욱, 2006). 이에 1997년 지역정보화재단으로 시작한 정보화 전문 기관은 자치정보화조합을 거쳐 현재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성장하였다.

### 2) 설립 근거 및 연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정보화 촉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관 제2조, 2020. 3. 4. 개정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최초 지역정보화재단, 자치정보화조합을 거쳐 「전자정부법」 제72조에 근거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갖추어졌는데, 법에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은 2001년 7월,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하고, 행정기관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법이 개정되던 시기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신인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포함(「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하고 있었으나, 2007년 1월 개정된 법률안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다.

### 3) 업무 범위 및 주요 사업 내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협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 공유, 데이터 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통의 정보시스템을 개발·공유·유지 관리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통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우리 국민, 기업체 등 누구나 안정적이고 동일한 서비스의 수혜가 가능하다.

〈표 3-1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요 사업

사업내용
1.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5.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6.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8.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외 확산·보급
9. 첨단정보기술 기반 행정·재난안전 등 공공서비스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10.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전자정부지원사업
11.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지원사업
12. 전자정부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13. 전자정부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14.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과 시설의 임대 및 관리
15. 기타 개발원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관(2020. 3. 4. 개정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이상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정보화 사업의 발굴,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정보화 교육 등이 이에 속한다.

〈표 3-1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야별 사업 내역

구분	주요 사업 내용
정보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행정정보시스템</li> <li>- 시군구(서울)행정정보시스템</li> <li>-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li> <li>- 자치법규정보시스템</li> <li>-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li> <li>- 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청백-e) 시스템</li> <li>-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li> <li>- 표준기록관리시스템</li> <li>- 지방재정관리시스템</li> <li>- 지방세정보시스템</li> <li>-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li> <li>-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li> <li>- 주소정보관리시스템</li> <li>- 정부디렉터리시스템 및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li> </ul>
정보인프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지킴-e)</li> <li>- 재해복구시스템</li> <li>- 공통기반전산장비</li> <li>- 클라우드시스템 정보자원 설계·구축</li> </ul>
공공서비스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타운</li> <li>-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li> <li>- 주민참여기반 현장문제 해결 사업</li> </ul>
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운영</li> <li>- 지자체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운영</li> <li>-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li> <li>- 지자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li> <li>- 모바일대국민 보안공통기반</li> <li>-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li> </ul>
지역디지털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정책 기획 연구</li> <li>- 데이터기반 지방행정 지원</li> <li>-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li> </ul>
대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협력</li> <li>- 국제협력</li> <li>- KLID아카데미</li> </ul>

※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접속일: 2023. 07. 01.)

#### 4) 추진 구조 및 사업 방식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자하여 마련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분담금 및 특별회비 등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공유 및 통일성 확보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의 국가지원금, 기금 등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행정 정보화에 필요한 각종 정보화 시스템을 발굴 및 구축 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공공기관과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지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다르게 설립 주체, 총 수입액, 지분 등의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형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 공공기관 설립 및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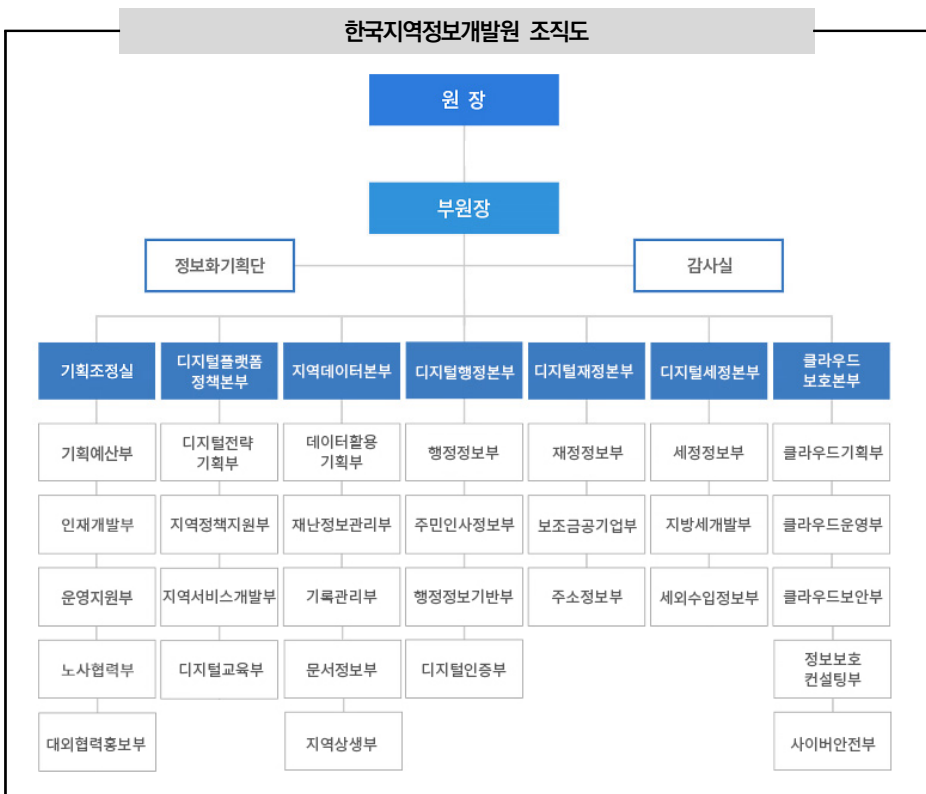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지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5) 조직 구성 및 예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운영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분담금·특별회비·국가지원금·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 용역수탁 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출연금과 분담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구성원인 시·도의 인구수, 기관 수, 재정력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시·군·구의 자치구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특별회비를 걷고 있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관, 제8조, 2020. 3. 4. 개정안).

[그림 3-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조직구성



※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접속일: 2023. 07. 10.)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2년도 예산 기준으로 총 317,775백만 원의 수입과 317,775백만 원의 지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입 내역 중에서 일반회계 수입은 총 313,009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764백만 원의 규모이다. 사업수입은 288,071백만 원, 경상수입 2,998백만 원, 사업외수입 58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은

3,487백만 원 등의 규모이다. 일반회계의 수탁사업 지출은 281,094백만 원, 국고보조 사업 3,881백만 원, 자체사업 3,995백만 원, 기타 예비비 24,039백만 원 수준이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2). 주요 사업별 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결산 기준으로, 1) 시도시군구 전산장비 27,218백만 원, 2)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8,686백만 원, 3) 지방세정보화시스템 13,739백만 원, 4) 지방재정시스템 10,394백만 원의 규모이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 경영 공시).

## 6) 성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정부의 정보화 혁신 선도기관으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 등급의 평가를 연속으로 받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4개 사업 및 시스템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에서 2022년 기준 평균 90.18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 이 외에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시스템 구축 및 국민지원금 지급 편의 개선 등 정부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화 전문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데일리한국, 2022. 10. 26.)는 평가를 받는다.

## 라. 시사점

공공 및 민간위탁의 방식은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민간 및 공공기관에 특정 사업과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선정,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며, 더불어 안정적인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위험(risk)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에 안정적일 수 있는 사업의 추진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중앙센터와 지역 센터 간의 유기적 운영과 업무 분담 등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평가와 모니터링 자체가 중요한 사업임을 보여 주는 사례로서 사업 평가 업무와 컨설팅 제공까지 담당하여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시설 부분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그 운영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자로 마련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분담금 및 특별회비 등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공유 및 통일성 확보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의 국가지원금, 기금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세부적인 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속에서도 분권화와 재정운영 원칙 속에서 기관 설립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같이 출자하여 관련 수요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참고 사례이다.

### 3. 공공기관 운영 방식 사례

#### 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

##### 1) 배경 및 필요성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만 50세~64세에 해당하는 50+세대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4월 설립되었다. 서울시는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였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300호).

##### 2) 설립 근거 및 연혁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6년 4월 설립되었다. 서울시50

플러스재단은 2015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현재는 재단과 더불어 서부, 중부, 남부, 북부 캠퍼스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3) 업무 범위 및 주요 사업 내용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다음과 같이 50+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캠퍼스 운영, 둘째, 일자리 사업, 셋째,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 넷째, 신문화확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3-14〉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 내역

사업 내용
1.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2.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3.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문화·여가 생활 지원, 상담
4.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장년층 관련 시설 지원 및 종사자 교육
6.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발굴·연계
7. 장년층 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출판 및 캠페인
8. 서울특별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 자료: 2023년 세부 사업 계획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

〈표 3-15〉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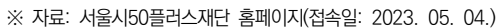
구분	특화사업	개관일
북부캠퍼스	문화산업 창업 및 연수	2020년 개관
서부캠퍼스	세대통합 및 공공 일자리	2016년 개관
중부캠퍼스	창업, 창직 & 일자리	2017년 개관
남부캠퍼스	마을 & 대학연계	2018년 개관
동부캠퍼스	대학 & 중소기업 연계	예정
동남캠퍼스	50+ 소셜벤처 & 기업 연계	예정

※ 자료: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접속일: 2023. 05. 04.)

첫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삶의 전환을 마주한 50+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50플러스캠퍼스를 마련하여, 상담 및 정보 제공, 교육과정 지원, 일과 활동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생애 전환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0플러스캠퍼스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에 권역별로 총 6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5] 서울시50플러스재단 조직 구성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 사업 주요 내용



넷째, 신문화확산 사업은 50+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1) 시민참여형 공익캠페인, 2) 캠퍼스 기반 기획사업, 3) 온라인 플랫폼 50+포털 운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캠퍼스 기반 기획사업은 캠퍼스 이용자들 간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은 물론, 지역사회단체 및 공익단체와 협업하여 공공영화 상영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50+세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봉사, 자원활동가 양성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 4) 추진 구조 및 사업 방식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장년층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서울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주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노후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5) 조직 구성 및 예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본부, 1실의 조직으로 정원 127명 중 2022년 11월 말 기준 122명의 현원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예산은 총 187억 원의 규모로 운영비 1,967,658천 원, 인건비 7,518,487천 원, 사업비 8,587,086천 원, 성과급 665,094천 원의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사업별 예산 활용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재단의 전체 사업 중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공헌형 일자리 운영’으로 114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경력 전환 및 전직 지원 사업 운영’은 21억 5,700만 원의 사업비 지출이 이루어졌다. 삶의 전환을 마주한 50+ 이상의 세대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4개 이상의 캠퍼스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인 ‘캠퍼스 시설 및 사업운영관리’는 18억 5,190만 원의 예산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 50+ 뉴딜인턴십 사업 운영’ 12억 3,300만 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업’ 9억 9,900만 원, ‘50+ 맞춤형 생애전환 교육과정 운영 사업’ 7억 8,700만 원, ‘서울도심권 50+센터 운영 사업’ 7억 600만 원, ‘서울 50+ 인턴십사업기반 조성 및 운영 사업’ 6억 8,500만 원의 사업비가 활용되었다.

[그림 3-6] 서울시50플러스재단 조직 구성



※ 자료: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접속일: 2023. 05. 04.)

## 6) 성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16년 개설 이후, 선도적인 중장년 지원정책의 도입과 제도화를 견인하는 핵심 기관으로 전문성과 국내외 인지도를 축적하였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성과 세부 지표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50플러스 전용 온·오프라인 공간 이용자는 2016년 이후 누적 오프라인 캠퍼스 116만 명, 온라인 포털 655만 명이다. 정책서비스 제공은 상담 12만 7천 건, 교육 67,556명, 커뮤니티 지원 등 3,245건, 일자리 모델 발굴 111건, 사회공헌·취업·창업 등 일자리 사업 9,149명이다. 2022년에는 다음과 같이 목표 대비 실적 달성의 성과가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3-16〉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2년 사업 성과

구분	단위	목표	성과
캠퍼스 이용 인원(연인원)	명	197,762	148,526
이용자 소통 활성화	건	16	18

구분	단위	목표	성과
50+일자리 모델 발굴 및 운영	건	35	35
일자리 참여 인원	명	3,296	3,990
창업·창직 지원	건	219	229
민·관 일자리 협력	건	18	20
생애전환설계 교육과정 운영	명	20,426	21,464
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 지원	명	38,420	40,479
당사자 활동 역량강화 지원	건	543	620
사회공헌활동 지원	명	874	947
정책의제 개발 및 연구	건	12	14
정책결과 대외 확산	건	16	16

※ 자료: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2 사업 연도 결산서(1).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15년, 전국 최초로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2년 현재 전국의 약 74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기관이 가지는 성과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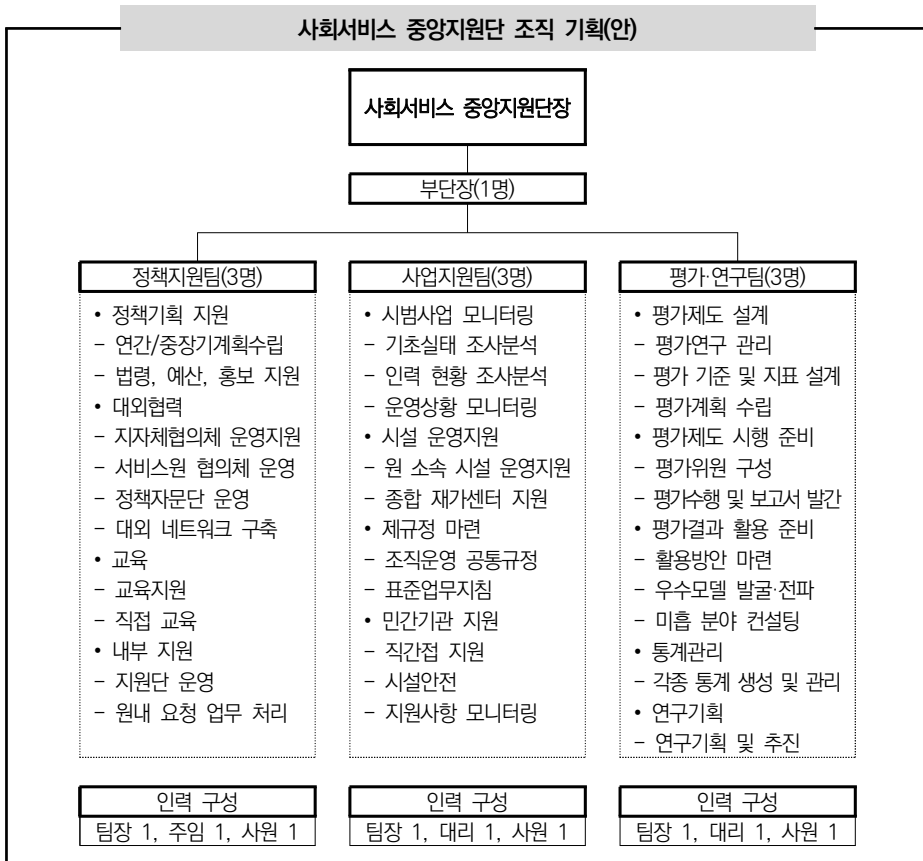
## 나. 사회서비스원

### 1) 배경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2년 설립되었다(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2019년 보건복지부는 급격하게 확대되는 공공의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2009년 1,640개소에서 2017년 3,261개소로 2배 이상, 바우처 서비스 기관은 1,274개에서 11,370개로 10배가량 증가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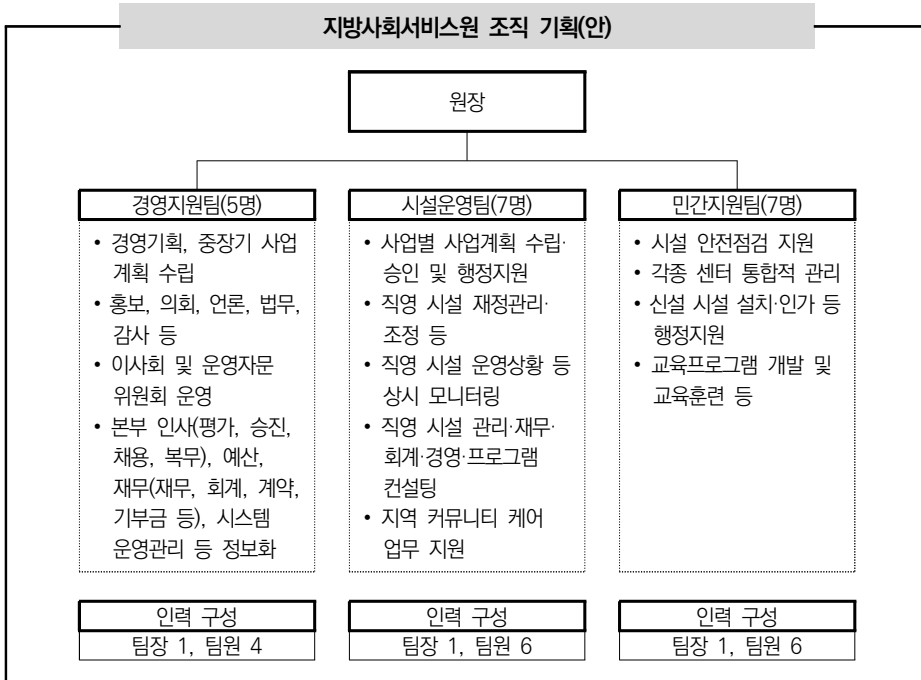
[그림 3-7]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조직 구성(안)



※ 자료: 보건복지부 4차 제출(2019. 5. 13) 자료

사회변화에 대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과 지방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중앙지원단은 약 10명의 규모로,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책기획 및 집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핵심으로 구성하였다. 지방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기획 당시,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참고하여 시설의 규모 및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그림 3-8] 지방사회서비스원 조직 구성(안)



※ 자료: 보건복지부 4차 제출(2019. 5. 13) 자료

## 2) 설립 근거 및 연혁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25일 설립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2023년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제주, 전북, 울산, 부산, 충북, 경북 지역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마련되었다.

## 3) 업무 범위 및 주요 사업 내용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첫째,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진흥, 둘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고도화, 셋째, 시·도 사회서비스원 혁신지원, 넷째,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종사자 지원, 다섯째, 사회서비스 정책지원을 전략 과제로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7〉 중앙사회서비스원 사업 내역

구분	사업 내용
품질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향상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을 통한 돌봄 공공성 및 역량강화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지원 -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및 긴급돌봄 지원 -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 등 민간지원 강화
이용자 종사자 지원·자원 개발을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 이용자 권익보호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사회서비스 자원발굴
정책지원·공급자 다변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 사회서비스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연계 - 민간지원 활성화 및 공급자 다변화 지원

※ 자료: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접속일: 2023. 05. 04.)

〈표 3-18〉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내역

사업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li> <li>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li> <li>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li> <li>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li> <li>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li> <li>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li> <li>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li> <li>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 계획 수립의 지원</li> <li>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li> <li>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 자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4) 추진 구조 및 사업 방식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sup>28)</sup>에서 정의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

28)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하고 있으며,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그 밖의 수입금을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 5) 조직 구성 및 예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다음과 같이 경영지원실, 사회서비스혁신본부, 사회서비스품질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서비스혁신본부 산하에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하여 운영 인력을 당초 27명 목표에서 5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예산은 246억 원으로 확정하였다(메디컬월드뉴스, 2021. 12. 04.). 이후 2023년에는 3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8%(56억 원) 증액되었다. 보건복지부(2023a)에 따르면, 2023년 중앙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으로 2022년 83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혁신 추진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증가로 인력 및 운영비의 증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약 12억 원 감축한 148억 원을 배정하였다.

2023년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200% 증대된 규모에서 1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신설·변경 사항 반영, 사회서비스원 지원 기능 구축, 아동 분야 정책 신설·변경에 따른 아동정보 통합관리기능 구축,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시스템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간 연계 지원을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9]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직 구성



※ 자료: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접속일: 2023. 03. 27.)

## 6) 성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충남, 대전,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남, 울산, 제주에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첫째, 정책지원 및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둘째, 사회서비스 혁신기반 조성, 셋째,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넷째, 이용자 권익보호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다섯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분야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와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사회서비스원법」 제34조에 근거하여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지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국민은 물론 정부, 관계 기관 등에 제공 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 투명한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다. 시사점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해당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50플러스재단과 같이 특정한 목적의 특정 사업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에 우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운영의 현실을 반영할 때, 정해진 예산과 조직 구성 등 기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및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기관 설립의 타당성 확보 등 사전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다양하고 많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한 갈등과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전국적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직 체계적으로도 중앙과 지역 간의 업무 분담과 체계적 관리에서 시사점이 크다.

## 4. 문화정책 부문 사례

문화 분야 정책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sup>29)</sup> 문화정책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정부기구,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나뉘며,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수직적 체계 내에서 각 주체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보조 사업이 전달되고 있다.

문화 분야 행정체계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부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부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 및 지역 정부 기관들 외에도, 국립, 도립, 시립 문화시설 등이 각 행정체계 속에서 대표적인 지역문화 전달 기관으로 역할을 한다. 특히 중앙의 경우 다양한 문화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능계열별 조직이 많이 활용된다. 지역의 경우 기초단위가 정책 수행의 장이 되며, 그 하위에 다양한 문화 관련 시설, 조직, 단체들이 전달 주체로 기능한다. 기초 단위에서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출연되거나(문화재단) 간접적으로 지정 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지방문화원)과 같은 공공형 주체와, 재원의 직접적 출연이나 보조가 아닌 공모 보조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형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연구」 참조.

〈표 3-19〉 문화정책 주요 전달 주제

구분	정부기구	중간조직(공공기관)	민간단체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시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부 산하기관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
광역지자체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부문 광역시도 공립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광역문화재단	민간 문화예술단체
기초지자체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 부문 시군구공립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기초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 문화예술단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지역문화 보조 사업 전달체계 개선 연구」.

국고보조사업은 두 가지 형태 즉 직접수행형과 위탁수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수행형은 중앙관서 및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정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다. 반면, 위탁수행형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공공 및 민간 보조 사업자들이 국고보조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업의 사례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토요문화학교운영사업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들은 직접수행형보다 위탁수행형 사업의 비중이 더 높으며, 대부분이 중앙집중형 전달 체계로 운영된다. 중앙집중형 전달 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정책 사업을 기획하되 이를 공공이나 민간 기관을 통해 집행하거나, 지방사무소에 사업 집행 권한을 위임하여 지방사무소가 직접 혹은 공공기관·민간기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중앙정부는 정책 사업의 기획, 집행 및 평가 권한을 독점하고, 사업전담기관에는 사업 집행 권한이 위임된다. 사업전담기관은 대체로 전문적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며, 이 전담기관은 서비스를 하위 기관에 재위탁하기도 한다. 사업전담기관은 주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예산을 배정받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

〈표 3-20〉 중앙집중형 전달체계와 구성 주체의 역할

담당 주체	역할		
	정책	사업	예산
중앙정부	정책기획, 집행, 평가	공공·민간전문기관 선정 전문기관 사업 진행 평가	전문기관 예산배정 전문기관 예산집행 평가
공공기관/ 민간전문기관	-	중앙정부 선정 응모 사업기관 심의선정 사업기관 사업집행 평가 중앙에 사업결과 보고	사업기관 예산배정 사업기관 예산집행 평가
사업기관	-	사업선정 응모 사업진행 사업결과 보고	사업예산 집행 사업예산 결과 보고
수혜자	-	사업기관 서비스 수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연구」.

문화 분야 주요 정책 사업들에서 누가 전달 주체가 되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되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 추진하는 문화정책 사업으로 한정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 중 관련 법과 고시를 통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인예술인복지재단이다. 이 중 주요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사업들에 대해 사업 추진 체계와 위임받은 권한 및 업무 등을 분석한다.

〈표 3-2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담기관

번호	설립 근거	지정 기관	지정 기간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 12.~
2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지역문화진흥원	2021. 7. 22.~ 고시일로부터 5년
3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8. 12. 5.~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11.~ 고시일로부터 3년
5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2. 25.~ 고시일로부터 3년
6	장애인예술인 전담기관 지정 고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1. 3. 2. ~ 2024. 3. 1.
7	예술인복지법	예술인복지재단	2022. 9.~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 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전담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1) 배경 및 필요성

국내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와 예술 영역은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그 형식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역시 사회적 맥락과 상황에 맞게 변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에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최초의 법정 계획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광역자치단체들은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질적·양적인 향상을 달성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 설립 근거 및 연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민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2005년 2월 5일). 2005년 12월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2006년 8월에 특수법인<sup>30)</sup>으로 전환되면서 법적 기구가 되었다. 2007년 4월부터는 기획재정부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연구를 총괄·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30) 특수법인은, 개별 법률이 해당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한 것과, 개별 법률 자체로써 직접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기할 점은, 후자의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방문화원, 조합, 협회는 공공기록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그 외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항목에 설명된 법인들의 절대다수가 이러한 특수법인에 속한다.

〈표 3-2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업무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2. 17., 2022. 1. 18.>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5. 교원의 연수지원
  6.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8.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9.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 ⑦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 ⑧ 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⑨ 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업무 범위 및 주요 사업 내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목표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학교 및 사회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학교, 교육시설, 교육단체 사이의 상호 연계와 협력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 연구와 조사를 진행한다. 교육시설과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연수 사업을 진행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도 담당한다.



〈표 3-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3년 주요 사업 현황

사업 구분	세부내역	자금 조달 항목	예산 (백만 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 학교예술강사 지원	정부 보조금	51,659
	◦ 학교예술강사 지원	지방교육 재정	31,780
	◦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정부 보조금	3,070
사회 문화예술교육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부 보조금	6,853
	◦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15,590
	◦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		3,604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		6,730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지원		90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부 보조금	2,000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1,445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		128
문화예술 ODA	◦ 문화예술 공적개발원조(ODA)	정부 보조금	576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지원	◦ 인건비	정부 보조금	7,780
	◦ 경상운영비		3,061
	◦ 경상사업비		16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	◦ 자격증 교부 비용	기타	40
기업사회공헌	◦ 예술꽃 새싹학교 지원	기부금	170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지원	정부 보조금	257

자료: 알리오 시스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설립 초기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두 개의 사업(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지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사연구, 통계, 정보, 평가, 정책 주창 기능, 혁신적 정책사업 개발 및 사업화, 네트워킹, 정책 거버넌스 구축, 지역의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표 3-24〉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방 이양 현황(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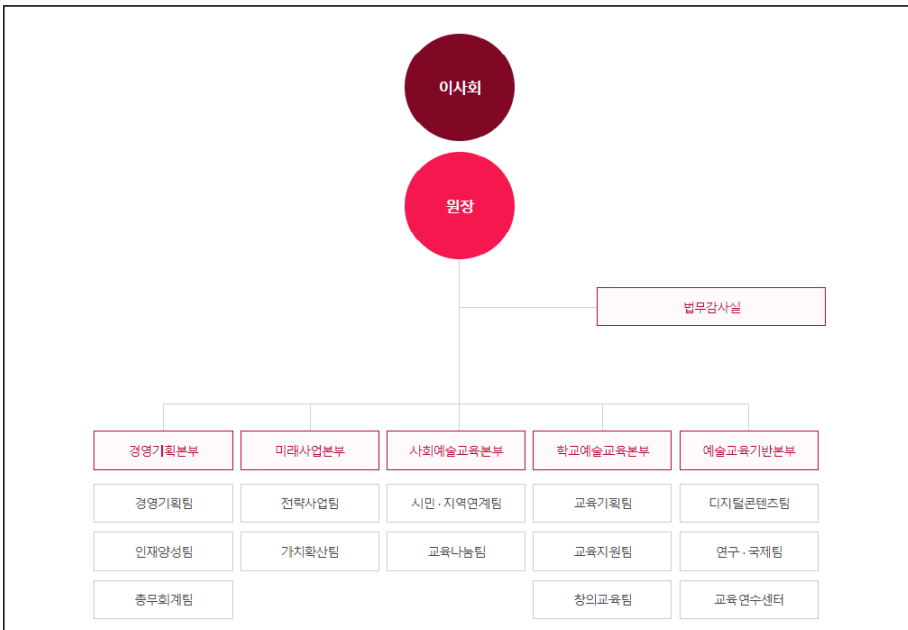
사업명	변화내용	
	변경 전(~'21년)	변경 후('22년~)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총액 26,090백만원)	지원사업비 (지특, 공동사업비 18,000백만원)	· 지방비 100%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존 예산규모 5년간 보전)
	지역센터 운영 (인건비 등 8,090백만원)	※ 지방이양 대상에서 제외 ※ 기존과 변동없음 : 국비~지방비 매칭(5:5)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총액 3,400백만원)	· 국비~지방비 매칭(5:5)	· 지방비 100%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존 예산규모 5년간 보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 4) 조직구성 및 예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기관 설립 이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와 동시에 정책 사업의 성과가 높아지면서 조직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023년 현재 1 실, 5 본부, 13 팀의 조직 체계하에서 153명이 소속되어 있다.

[그림 3-10]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도



자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023년 기관의 예산 총액은 1,348억 원으로, 인건비 78억 원, 경상운영비 31억 원, 사업비 1,240억 원이다. 지자체 센터로 직접 교부되는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센터별로 규모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으며, 지방 분권 정책기조에 맞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센터의 운영비를 지방비와 매칭해서 교부하고 향후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은 지자체 자체 예산에서 편성하여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지역문화 진흥 사업(전담 기관: 지역문화진흥원)

### 1) 배경 및 필요성

중소도시 중심으로 지방의 쇠퇴 우려가 높아지고, 개인 삶의 질을 우선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문화정책의 지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문화 향유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여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환경의 개선과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sup>31)</sup>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년 1월 28일) 및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왔다. 2020년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여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하여 다수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2) 설립 근거 및 연혁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재)생활문화진흥원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17년에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재)지역문화진흥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였다. 2019년에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여가친화기업선정지원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1년 7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5년간 관련 사업들을 추진 및 운영한다.

31)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예술정책백서」.

〈표 3-25〉 지역문화진흥법상의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업무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
2.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원
5.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6. 제12조에 따른 협력활동 지원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8.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9.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 12. 2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3-26〉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3(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지역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것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춘 것
4. 법 제13조의3제2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정보의 수집·관리·구축 및 통계분석 등이 가능할 것

②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
3.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행사 등의 실시

[본조신설 2021. 6. 2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업무 범위 및 주요 사업 내용

(재)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명기된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원, 지역 간 협력활동 지원, 문화도시 지원,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표 3-27〉 지역문화진흥 정책 주요 추진 과제 및 사업

정책 목표	정책 과제	사업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역량강화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가. 지역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
		라.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마.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바.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 창의적 문화 공간 조성
	지역문화브랜드 육성	가. 문화의 달 행사 개최
		나. 지역특화 문화행사
		다. 지역문화대상 선정
		라. 지역 문화자원의 특성화, 차별화 및 지역재생 지원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날 확대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및 홍보, 평가
문화도시 진흥	문화도시 활성화 진흥	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 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예술정책백서」 내용 재구성

### 4) 조직 구성 및 예산

지역문화진흥원의 조직은 2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총 45명이다. 경영기획부는 경영관리팀과 전략기획팀으로 구성, 전략기획팀에서 지역문화 전문인력, 문화도시, 유희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사업을 담당한다. 문화사업부는 생활문화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팀, 교류 협력팀으로 구성되어 해당 사업들을 운영 및 지원하며 사업 담당팀은 평균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의 예산 총액은 2022년 기준 약 260억 원으로, 지역문화진흥원 자체 운영비가 24억 책정되어 있다.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이며,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도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8〉 2022년 지역문화진흥원 보조금 현황

보조사업	국고보조금(천 원)	재교부(천 원)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7,250,000	6,231,000
2022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4,600,000	3,843,936
2022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콘텐츠특성화사업	2,600,000	2,400,000
지역문화진흥원 지원	2,400,000	199,65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2,045,000	1,448,013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	1,500,000	1,230,000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1,450,000	1,250,000
2022생활문화공동체활성화	1,360,000	1,200,000
2022 문화가 있는 날 민간 협력 마케팅 지원	1,219,000	128,194
2022 유희공간 문화재생 사업 활성화	481,250	142,462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	400,000	35,560
2022년 여가친화지원사업	394,000	17,930
2022 지역문화 활동 지원	200,000	160,000
2022년 지역문화대상	100,000	33,540
2022 문화가 있는 날 종합안내센터 운영	100,000	4,894
총계	26,099,250	18,325,181

자료: 이나라도움 자료 재구성

## 다.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 (전담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 배경 및 필요성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의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증가했다.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문화다양성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문화다양성 정책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2021년 11월 22일).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3년간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인 ‘문화다양성 주간’을 개최하고,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2) 설립 근거 및 연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전신으로 한다. 2005년 8월에 기관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 결정 체계에서 합의체 기구로 전환하였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과 매개, 향유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술 분야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고시를 통해 2021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2023년에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지원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표 3-2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다. 위탁업무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에 관한 업무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업무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 전담기관 지정 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
부칙 부칙 〈제2021-60호, 2021. 11. 2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업무 범위 및 주요 사업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다양성 사업 전담기관이기는 하나 문화예술과 관련한 기타 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해당 기관 예산의 대부분은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에 소요되며,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0.8% 수준이다.

〈표 3-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 추진 사업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세부 사업	예산	비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예술창작지원	51,644	12.52
	예술인력 육성	32,629	7.91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8,000	4.37
	예술인생활안정자금	1,087	0.26
	지역문화예술지원	3,294	0.80
	예술의관광자원화	7,083	1.72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22,055	5.35
	문화예술향유지원	248,793	60.33
국고수탁사업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3,204	0.78
	우리가치 인문동행	1,000	0.24
	인생나눔교실	3,300	0.80
	비평 및 작가육성 지원	2,975	0.72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지원	1,000	0.24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5,611	1.36
	공공미술 프로젝트	865	0.21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5,061	1.23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1,700	0.41
국민체육진흥기금 수탁사업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671	0.16
	예술기록물DB 구축	365	0.09
	도서관상주작가지원	839	0.20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992	0.24
	작고문인선양사업	197	0.05

자료: 이나라도움 자료 재구성

#### 4) 조직 구성 및 예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처 4본부 1극장 1관 1실 19부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은 예술확산본부의 지역협력부에서 4명의 전담 인원이 맡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년 총예산은 5,700억이며, 문예기금과 체육기금, 일반회계로부터 편성된 예산이다. 사업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역은 문화예술향유지원 관련 사업이며,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위한 예산은 약 32억이다.



〈표 3-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예산

항목		(백만 원)
총계		570,672
사업비+경상운영비		438,902
사업비		415,620
문예 기금	소계	539,637
	○ 사업비	384,585
	- 예술창작지원	51,644
	- 예술인력육성	32,629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응자)	18,000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1,087
	- 지역문화예술지원	3,294
	- 예술의관광자원화	7,083
	-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22,055
	- 문화예술향유지원	248,793
	○ 기금운영비	23,282
	- 인건비	12,542
	- 기타운영비	10,740
	○ 기금간거래	17,895
	-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17,895
일반 회계	○ 여유자금운용	113,875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13,875
	소계	27,971
	○ 사업비	27,971
	-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	3,204
	- 우리가치 인문동행	1,000
	- 인생나눔교실운영	3,300
	- 공연예술연습공간조성및운영	2,975
	- 문학나눔도서보급	5,611
	- 공공미술프로젝트운영	865
	-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	-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5,061
	-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1,700
	- 비평 및 작가 육성 지원	1,000
	-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인문360)	960
체육 기금	- 디지털 인문뉴딜	1,140
	-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655
	-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운영	500
	소계	3,064
	○ 사업비	3,064
	-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671
	- 예술기록물DB구축	365
	- 도서관상주작가지원	839
기타	- 원로예술인공연지원	992
	- 한국작가문인선양사업지원	197
	- 2022년 어린이 문학주간	-
	소계	-
	○ 사업비	-
	- 문체부 위탁협력교육	-
	- 빅데이터 센터 육성 및 플랫폼 구축	-

## 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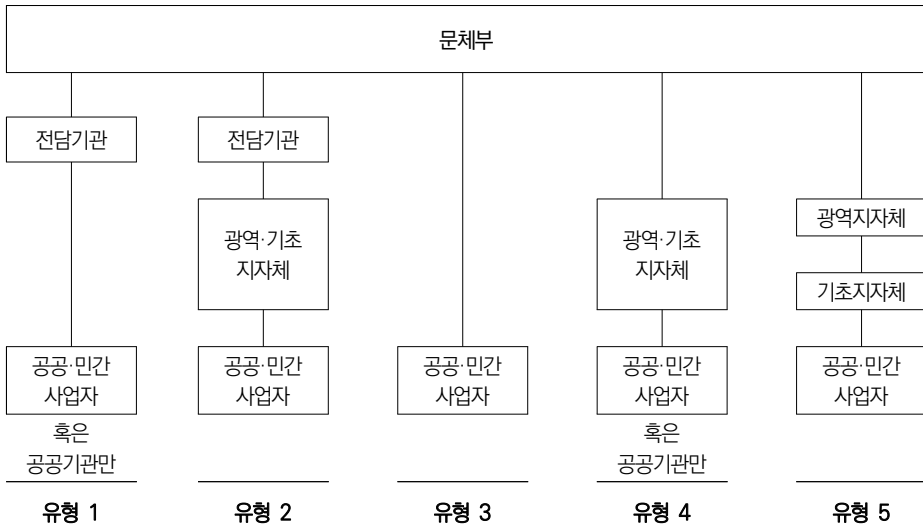
전담기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 체계를 보조금 교부의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여러 유형들이 나타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사업 수행이 진행되느냐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방 분권화로 인하여 이러한 방식들은 더욱 다양한 사유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은 자체적인 특성과 중앙정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업체 등 각 주체들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① (문체부-전담기관-공공-민간 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기관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을 위탁하거나, 전담기관이 공공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방식이다. 전담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대다수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일부 사업들은 전담기관이 교부하는 대상이 공공기관(학교, 생활문화센터 등)에 한정되기도 한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아르떼 아카데미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다양성 주간,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문화다양성 교육사업도 전담기관을 통해 공공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교부금이 집행되는 방식이며,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가 있는 날 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전담기관이 공공기관에만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들은 유치원, 학교, 지역의 생활문화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로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다양성연구학교,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다.

② (문체부-전담기관-광역·기초지자체-공공-민간 사업자) 문체부가 전담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해당 운영 기관은 공공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재교부한다. 문화예술위원회의 무지개다리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③ (문체부-공공-민간 사업자) 문체부가 공공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 운영 지원이나 관리와 같은 간접적 역할만 수행한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꽃 씨앗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 3-11] 문화 사업 추진 체계 유형 구분



④ (문체부-광역·기초지자체-공공·민간 사업자) 문체부가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의 운영 기관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고 해당 기관이 공공 및 민간 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업들은 지역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에만 사업의 운영을 위탁한다. 이런 사업들의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에 대한 운영 지원, 관리, 컨설팅이나 협의회 운영 등의 보조적 역할만 담당한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사업, 꿈꾸는 예술터 지원사업, 기초단위 문화예술 거점 구축 지원사업, 문화파출소 사업과 지역문화진흥원의 문화도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형 주체만을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창의예술 랩 지원사업으로 지역 문화재단들이 사업을 위탁받는다.

⑤ (문체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공공·민간 사업자) 문체부에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공 및 민간 사업자 순으로 재교부하는 유형이며, 해당 사업들에서 전담기관은 사업 운영의 지원과 관리 등의 역할만 담당한다. 지역문화진흥원의 유희공간 문화재생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유형별 구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운영 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전담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업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여 지역 내 인문정신문화 사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네 번째 유형에 맞는 사업의 형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유형들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적절한 운영형태의 조합이 필요하다. 중앙전담기관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기관이 해야 할 사업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소결

---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추진 체계의 구성 사례를 탐색하기 위하여 첫째, 정부 조직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례, 둘째, 공공 및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 셋째, 공기업(공공기관)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방위사업청과 재외동포청 개청의 사례는 직접 운영의 사례이며, 공공 및 민간 위탁의 사례로는 서울 중앙주거복지센터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사례를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새롭게 공공기관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로는 서울50플러스재단, 사회서비스원의 사례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들의 추진 체계 사례를 정리하였다.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한 결과, 해당 행정서비스의 특성이나 주체, 대상, 예산,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행정 추진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행정 서비스 수요의 발생 등으로 직접 운영, 공공 및 민간위탁, 공공기관 설립의 행정 추진 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동안 행정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던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기존에는 행정서비스 지원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강화, 새로운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 등이 부각되어 행정체계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물론 기존의 행정서비스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작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직접, 위탁, 공공기관 설립 및 활용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에 따라 직접운영, 공공기관 설립 등의 행정 추진 체계 마련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분야 및 서비스 대상의 범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적,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 간에 형성될 수 있는 유착 등의 관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가지원을 담당할 행정기관을 선정하고 운영 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는 반대로 자활 및 주거 등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규모 대상 서비스 지원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해당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제4장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 제1절 추진 체계 발전 방향

---

### 1. 기본 원칙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첫째, 추진 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1차적 목적은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 사업 분절화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그 1차적 목표로 한다.

둘째, 인문정신문화 사업은 인문학의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관련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자체 인문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관련 민간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문프로그램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대별 수요 또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시설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과 동시에 지역 내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인문 프로그램들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시대적 상황과 예산 상황의 변동에 따라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수혜자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주체나 목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 개설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는 한, 공공영역의 인문프로그램의 특성을 유지하는 프로그램

의 보급은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근거하여 추진 체계 발전 방안을 구성한다.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상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인문프로그램 확대, 거점 공간 조성, 지역 인문자원 발굴 확대, 인문진흥체계 재정립 및 전문역량 활용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인문정신문화사업 추진의 기본을 형성하고 있다.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의 취지와 중점 사업 방향에 맞추어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앙 인문정신문화 사업 전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문정신문화 사업 수행기관의 프로그램 추진 역량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분권화와 지역별 인문 역량 강화, 생태계 조성 필요성에 따라 중앙 인문정신문화 전담기관의 역할이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역할과 임무가 변경되더라도 전반적인 역량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 체계가 발전하여야 한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기반하여 인문정신문화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고 민간 영역의 활동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추진 성과에 기대어 민간 영역에서의 인문정신문화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전담기관 필수 기능

첫째, 사업수행기관들에는 본연의 고유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 운용이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인문전담기관은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둘째, 분산된 사업 수행 구조 속에서 전담기관 이외의 사업 수행기관들의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셋째,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단일한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 능력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연구기능을 갖추어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의 심화를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단일한 홍보 전략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은 인문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와 이슈를 다루며, 융복합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시설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다. 문화체육부 고시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담기관이다. 두 전담기관의 역할 차이는 거의 없다. 먼저 ‘인문학’ 진흥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차이가 있다. 양자 모두 전문인력 양성·활용, 관련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작은 차이라면 교육부 고시에서는 연구, 정책 관련 조사·분석·평가가 포함되지만, 문체부 고시에는 없다.

〈표 4-1〉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vs.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시행 2023. 3. 20.] [교육부고시 제2023-9호, 2023. 3. 20., 폐지제정]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시행 2023. 2. 2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3-10호, 2023. 2. 3., 폐지제정]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72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044-203-2557
1. 전담기관 가.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나. 대표자: 이광복 다. 사업자등록번호: 314-82-13322 라.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1. 전담기관 가. 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 사업자등록번호: 208-82-01138 다.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2. 위탁업무 가.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 나. 인문학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다.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1)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진흥 관련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전담기관 위탁업무 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시행 2023. 3. 20.] [교육부고시 제2023-9호, 2023. 3. 20., 폐지제정]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72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시행 2023. 2. 2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3-10호, 2023. 2. 3., 폐지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044-203-2557
3. 전담 기관 지정기간 가. 고시일로부터 3년	3. 전담기관 지정 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
4. 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부칙 <제2023-9호, 2023. 03.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교육부 고시 제2020-222호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를 폐지한다.	<input type="checkbox"/> 부칙 <제2023-10호, 2023. 02. 03>  1. 이 고시는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0-10호, 2020. 2. 25.)」는 폐지한다.

## 제2절 중앙전담기관 지정 운영 방안

### 1. 전담기관 수행 역할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법률 시행령 제 11조에는 전담기관의 업무로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업무만 수행하였고, 1번과 2번에 대한 업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은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였다.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에서는 ㉠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 국내외 교류협력 등이 위탁업무로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시행령이든, 고시이든 전담기관의 역할은 인문정신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참여자와 이해관계자가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전담기관의 업무이다. 이것은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전담기관의 사례(시행령과 고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문정신문화 전담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4-2〉 전담기관의 역할: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 관리 및 기획	직접 단위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위사업들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의미함 이를 위해서 시행령 제11조의 1의 연구, 2의 조사사업을 수행함 고시의 ㉔ 관련된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사업을 수행함(일부는 홍보 및 아카이빙과 중복됨) 세부 사업으로는 정책개발 및 건의(중요도 73.8점), 정책조율(73.0점)
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인문사업 현장의 성과평가가 아니라 단위사업별 성과평가를 의미하며, 모니터링은 두 가지 차원에서 행해짐 첫 번째는 단위사업 지역 운영기관의 모니터링이며, 두 번째 단위사업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임(후자는 점차 지역 운영기관으로 이관할 수도 있음) 전문가 조사에서 모니터링의 중요성은 68.5점,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의 중요성은 67.9점임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은 단위사업 총수 증대, 단위사업별 심화 프로그램 개발, 단위사업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이라고 할 수 있음 프로그램 개발은 사업관리 및 기획과 연계되며, 연구조사사업을 기반으로 함 인력양성의 대상은 인문학 강사가 아니라 인문정신문화사업의 기획자, 개발자, 운영자, 홍보 및 아카이빙 전문가를 의미함 인문학 강사 양성은 인문전담기관이 아닌 대학, 학술단체, 교원단체의 영역이며, 전담 기관에서는 인문학 강사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음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양성은 전문가 조사에서 중요도가 82.5점, 80.9점으로 가장 높음 한편 강사관리 및 지원 사업의 중요도는 77.1점이었음
홍보 및 아카이빙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인문정신문화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춤 단위사업 주관처 또는 개별 현장에서 홍보하겠지만 인문정신문화사업이란 브랜드 내에서 통합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함 아카이빙은 사업관리 및 기획에서 언급한 고시의 ㉔ 관련된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사업의 일부로 보존 관련 사업과 분류체계 사업을 진행함 아카이빙을 통해 사업기획에서 온라인 인문사업을 기획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홍보 강화 개별 현장에서 이뤄진 우수 사례를 관리하면서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데 전문가 조사에서 중요도가 81.4점으로 매우 높음
지역협력 및 국제교류	전담기관은 간접지원에 집중하고 지역단위에서 단위사업의 통합공모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튼튼히 설정함. 지역협력 네트워크는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순서로 이뤄지나 반드시 중앙-광역-기초 3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음 지역협력네트워크는 공간적 협력뿐 아니라 인문사업과 문화사업의 연계를 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국제교류는 인문정신문화사업의 세계화, 즉 K-인문을 위한 네트워크사업임

## 2. 전담기관 조직 구성 방안

전담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체계에서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신설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가. 현행 체계하에 역할강화 방안

#### 1) 필수 역할

현행 인문정신문화 사업 전담기관 체제 안에서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확장과 관련된 운영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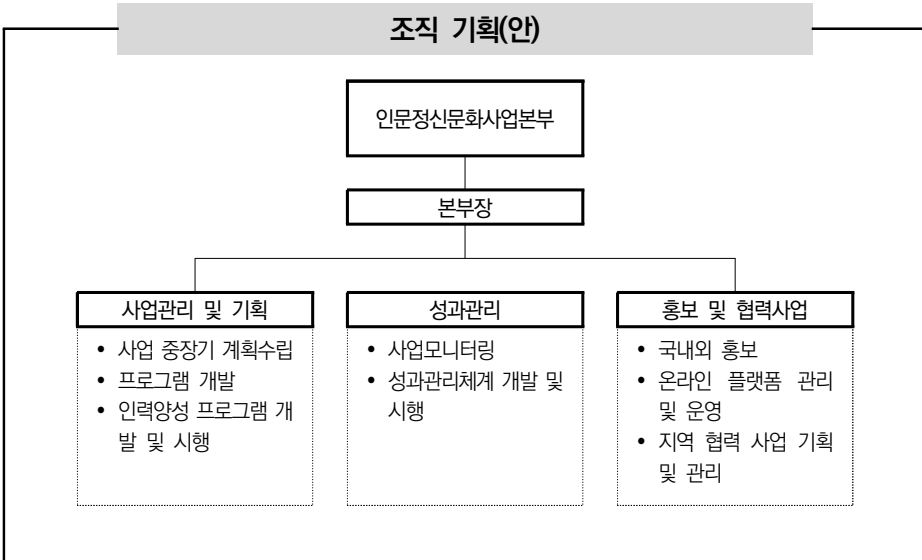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교류협력사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담기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고시처럼 연구와 조사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인문정신문화 진흥 연구와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구용역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전담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관리 및 기획,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조사 사업이 필수적이다. 초기에는 연구와 조사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점차 독립된 연구 사업을 수행하도록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 2) 조직 구성

이전 인문전담기관이었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현재 인문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모두 인문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하나의 팀만 구성하여 관련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와 같이 인문전담기관이 하부 단위의 사업에만 집중하여 역할을 수행한다면, 1개 팀 규모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자 한다면, 한 개의 팀 규모로는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연구, 홍보,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까지 수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운영예산도 지원되어야 한다. 운영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어느 기관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도 최소한 3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본부 또는 실 단위 사업으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표 4-3〉 전담기관 역할 강화 조직 계획안



### 3) 사업수행체계

그동안 문체부에서 직접 전담기관 이외의 사업수행기관에 예산을 배분하여 사업들을 수행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인문정신문화 사업 예산은 인문정신문화 사업 전담기관을 통해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인문정신문화 사업 체계를 일원화, 체계화 하고 예산 집행과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기존에 직접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들은 인문전담기관을 통해 사업을 배분받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장단점

현행 체계하에서 역할 강화방안으로서 현재 전담기관 역할 기관 내에 인문정신문화사업 총괄 본부(또는 실)를 구성하는 것은 신설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 단기간 내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현행 체계 내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전문가들도 전담 조직 신설보다는 현재의 역량 강화를 선호한다(현



행 유지하면서 지원 강화 36.1% > 현행 유지 속 지정 기간 연장 27.5% > 공공 기관 설립 24.9% > 민간법인 설립 4.8%). 그리고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변경하지 않은 속에서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담기관 내의 반발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문전담기관을 맡고 있는 기관이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내부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예산협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운영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당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고, 현재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규모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잘 운영되어 오던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구조조정 및 담당 기관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전담기관 체제에서는 별도의 고유목적 사업이 있는 기관이 전담기관 역할을 한다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따라서 언제든지 조직 규모와 투입 인력이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나. 신설 법인 구성 방안

두 번째는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것이다. 인문정신문화 사업만을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

### 1) 법적 근거 필요

법인 신설은 법률에 새로운 조를 하나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장이 없이 조항으로 구성되기에 당장 장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조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한국문화예술연합회)를 참조할 수 있다. 새로운 「인문학법」의 조문(특수법인이 되는 기관의 이름) 1항~4항(법적 성격 및 설립등기, 규정 적용, 정관 및 임직원 등)에서는 일반적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5항에서 법인의 역할을 적시하고, 5항에서는 특수법인의 사업을 호별(號別)로 나열한다. 각호(各號)에 들어갈 내용은 현재의 고시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각호에서 특수법인의 역할이 규정되면 현재 고시에 표시된 법률 조항(예를 들어, 15조의 전문인력 양성, 제16조1항의 자료발굴 및 수집 등)은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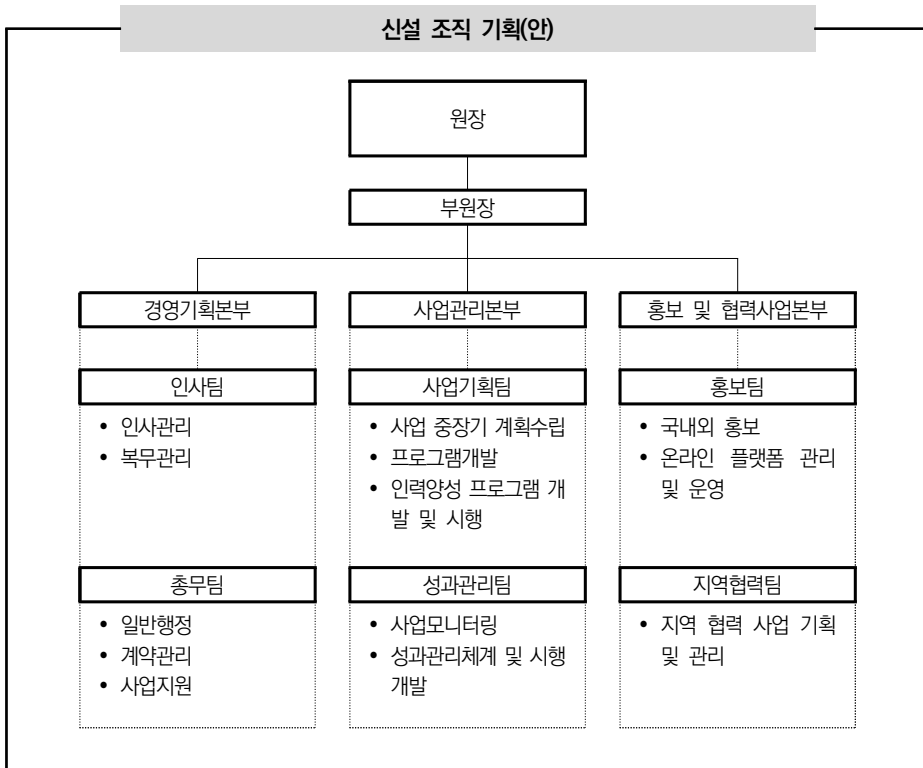
## 2) 필수 기능

전담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리 및 기획, 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아카이빙, 지역협력 및 국제교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효과측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다면, 그 효율성을 더욱 증가될 것이다. 신설 법인이 아니고서는 이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존 전담기관 체제에서는 기관들에 각자의 고유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문정신문화 사업만을 위한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성과관리, 홍보, 지역협력 및 국제교류 사업까지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 필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설 조직이 필수적이다.

## 3) 조직 구성

신설 조직에서는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성과관리, 홍보, 지역협력 및 국제교류 사업을 각각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전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를 증진하기 용이하다. 연구관련 조직을 별도로 갖추면 좋을 수 있지만, 개별 업무별로 연구인력을 일정하게 배분하여 배치하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직 경영 및 관리 부서를 제외하고, 필수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팀, 성과관리팀, 홍보팀, 지역협력팀 등 최소 4개의 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기획팀은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성과관리팀은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성과관리체계를 연구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홍보팀은 국내외에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홍보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지역협력팀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의 협력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지역단위 인문정신문화 사업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표 4-4〉 신설 전담기관 조직 구성 계획안



#### 4) 장단점

장점은 인문정신문화 사업 전담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담기관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인문정신문화 사업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프로그램 개발, 홍보, 지역협력, 국제교류 등을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다.

단점은 기관 설립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긴축 재정 상황에서 별도의 전담기관 신설에 동의를 얻기는 매우 힘들다. 기관 설립의 장점과 사업 관리에서 나타날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 주기 힘든 상황에서 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기관 설립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 수행체계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사업 수행기관에서 그동안 역할을 해 오던 직원들의 인사변동이 커질 것이며, 관련한 갈등 조정 업무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별도의 기관 설립은 중장기 과제이지만 방안을 준비하는 일은 늦출 필요는 없다. 현재 체계 내에서 역량을 강화하면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별도 기관이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시점에서 신규 기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 제3절 지역 인문 추진 체계 구성 방안

#### 1. 지역 인문 추진 체계 구성 계획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6번은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다. 세부 과제로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이 있으며, 실행 과제로 증장년층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문화기반시설 활용 인문가치 확산,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지원 등이 있다. 또 다른 세부 과제는 (지역 중심 문화 균형발전) 특색 있는 지역문화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이다. 그 실행 과제 중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지역문화 정책포럼 등에 기반한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중심 문화거버넌스 확립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지역 추진 체계 구성에는 위의 정책과제의 기초에 맞추어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길 위의 인문학’ 등 기존의 인문정신문화 사업들은 지역 단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개별 기관별 공모나 용역업체 위탁운영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일부 인문 사업을 지역별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업으로 진행하여 왔다. 기존의 사업들이 그 자체로 여러 성과들을 거두어 왔지만, 지역의 인문 추진 체계와 거버넌스 육성에는 큰 역할을 해 오지 못했다.

#### 인문문화진흥센터 운영(안)

- ◇ **(광역)** 문화기반시설, 지자체 및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 기초·마을 단위 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문 진흥 사업 발굴 및 추진
- ◇ **(기초)** 기초 단위 사업 기획·운영, 지역 주민 인문 공동체 활동 지원 등
- ◇ **(마을)** 골목, 서점 등 마을 인프라를 활용한 인문 프로그램 기획·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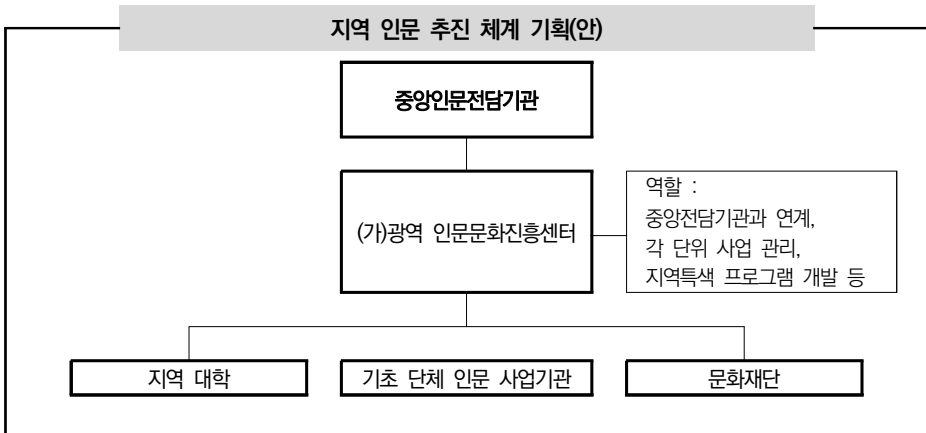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별 인문전담기관으로 인문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광역과 기초 및 마을 단위까지 기관을 지정하여 인문문화진흥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인문 전담기관이 광역, 기초, 마을 단위 사업까지 지원하고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낸다면, 민간 생태계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지역별 인문전담기관을 지정·운영 하여야 할 경우,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문정신문화 사업은 기존 문화정책 사업의 순서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없다. 중앙 단위 전담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다가 지역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형태, 또는 계속해서 중앙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다. 2023년 3월에 발표된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에서는 3대 전략으로 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②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③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을 설정했다. 여기서 인문정신문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인문사업 역시 지역 격차를 벗어난 공정성, 지역의 고유성과 창의성의 기본 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13개 사업 가운데 지역 문화생활소통의 중심인 도서관에서는 인문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로컬콘텐츠 개발에서는 로컬리티 인문학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문화와 인문을 통한 주민활력 증진이 이뤄져야 한다.

인문정신문화를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는 2023년 4월 발표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2023~2027」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인문과 문화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한다(C-4)는 계획이다. C-4계획은 전략 C(지역과 사회를 품격 있게 연결하는 K-컬처)의 사업이다. 이 같은 분류는 인문사업이 철저하게 지역 기반의 사업임을 보여 주는데, 현재 고민해야 점은 인문사업의 콘텐츠뿐 아니라, 추진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인문정신문화사업이 지역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인문전담기관을 구성하는 게 필요한지 혹은 효과적이지에 답해야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전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59.1%로 부정 응답 13.0%보다 훨씬 많았다. 물론 보통이란 응답이 27.9%로 적지 않지만, 적어도 전문가들은 지역 전담기관이 구성되는 게 인문정신사업의 발전에 적절하다고 인식한다.

## 2. 지역 인문 추진 체계 구축 방향

### 가. 추진 체계 구성 방향



중앙의 전담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단위 기관은 일단 (가) 광역 인문문화진흥센터로 칭하고 논의를 진전시켜 본다. 중앙인문전담기관은 광역 인문문화진흥센터에 대한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업무, 그리고 협력사업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한다. 업무의 기본원칙은 광역 인문문화진흥센터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광역 인문문화진흥센터는 광역 지역 특색의 인문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기초단체에서 수행되는 인문프로그램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지역 내 인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기초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문화재단과 문화원 등 관련 기관, 지역 내 대학 및 문화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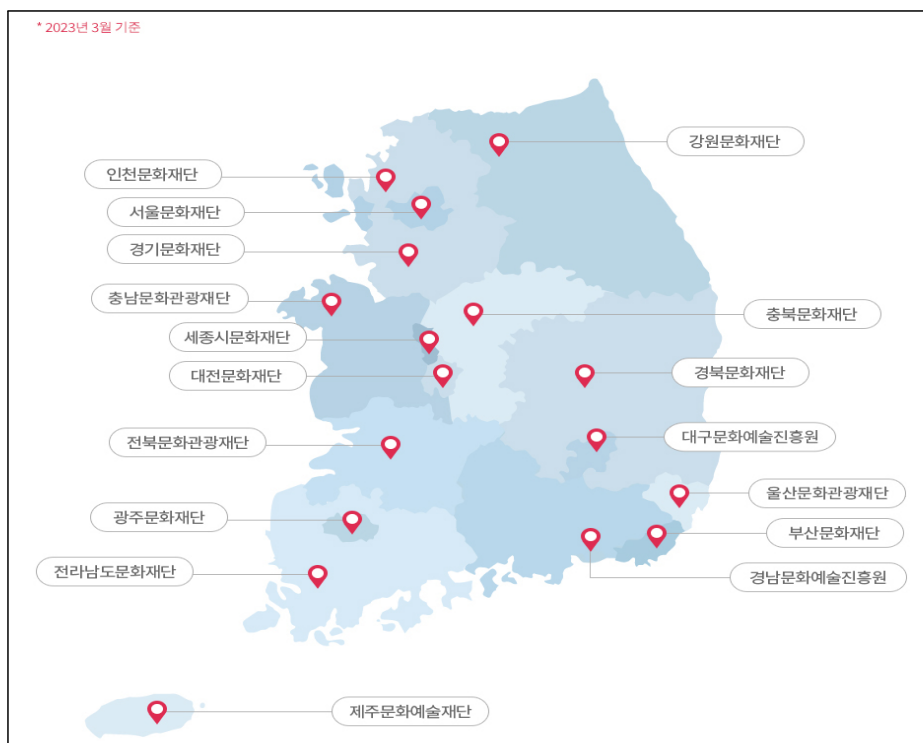
### 나. 추진 체계 구성에 활용 기관

광역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공공은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산하 연구원, 문화기관, 그리고 광역대표도서관이다. 민간은 대학과 민간단체(컨소시엄)가 될 수 있다.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기관은 문화재단이다. 광역단위에서는 지역별 광역 문화재단

이 있다. 인천, 서울, 경기, 충남, 세종, 대전,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강원, 충북,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에 각각 광역문화재단이 설치되어 있다. 문화재단은 현재 지역 내 거의 모든 문화사업을 담당한다. 중앙에서는 다양한 전담기관이 문화 관련 업무를 나눠서 수행하지만 지역으로 내려가면 기능별로 조직이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을 운영한다. 예술위원회 사업,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 등은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중앙단위의 사업뿐 아니라 시도 자체의 사업을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 문화시설을 운영하기도 하고, 광역지자체의 사업을 위탁운영하기도 한다. 문화재단이 하나의 인문사업까지 담당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림 4-1] 광역문화재단 현황



문화예술교육에서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는 현재도 문화재단 내에 있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중앙의 전담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정받은 기관이지만 문화재단에서는 대체로 하나의 팀(문화예술교육팀)에서 센터 역할을 겸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 문화예술교육센터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지역 주관기관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현재는 별도의 주관기관(대체로 대학교 산하)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운영한다. 문화예술교육센터의 경우에서 보듯이 문화재단이 지역의 인문학 사업을 총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문사업은 문화예술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지만 문화 관련 사업과 성격이 상이한 측면도 있는데, 이것을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재단에서 담당하기는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광역시·지방자치단체들은 연구원이 있다.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강원연구원, 충남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북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울산연구원,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 등이 있다. 연구원 자체가 지역의 인문사업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광역 연구원들은 경제와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사회문화 관련 사업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광역 연구원이 인문사업의 전문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별도의 센터를 수립하거나 현재의 지역학센터를 활용해 볼 수 있다. 현재 전북연구원에는 전북학연구센터가, 부산연구원에는 부산학연구센터가, 제주연구원에는 제주학연구센터가, 대전세종연구원에는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학 연구센터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을 기본으로 하기에 인문사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광역 연구원의 지역학센터가 인문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학센터가 없는 연구원에서는 별도의 인문문화 및 지역학 진흥 센터를 구성할 수도 있다. 연구원에는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들이 있는데 전임연구원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연구본부(실)의 연구원이 겸무하는 경우도 있다. 전북연구원의 성별영향평가센터, 양성평등센터, 부산연구원의 인구영향평가센터,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여성가족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등처럼 별도의 센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연구원과 사도가 인문진흥에 관심이 많다면 지역학센터 또는 연구원 내 별도센터 구성은 인문사업의 효과적 진행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도서관 중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이 있다.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표 4-5〉 광역대표도서관 현황

구분	도서관명	주소
서울	서울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부산	부산도서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10번길 33
대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10길 25
인천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
광주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30
대전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
울산	울산도서관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40
세종	세종시립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07
경기	수원시선경도서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23번길 68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100
충북	청주시립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93
충남	충남도서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전북	전북도청도서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남	전라남도립도서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
경북	경북도서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
경남	경남대표도서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남로 221

도서관은 도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기관에 비하여 인문에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마다 광역대표도서관이 있기에 그 도서관이 인문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되기도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인문사업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5.9%로 다른 기관에 비하여 많았다. 광역대표도서관이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려면 두 가지 정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나는 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에 인문사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실제 제2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여력이 없는 도서관이 인문사업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문화재단이나 연구원과 달리 도서관은 공무원 조직인데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조율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도서관을 제외한 문화시설 가운데 인문학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관은 문화원이다. 향토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문화원은 인문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광역단위에 존재하지 않고 기초지자체를 단위로 활동한다. 따라서 시도에서 특정한 시군구의 문화원이 광역을 대표하는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적합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문화원은 기초 단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한편 민간에서 광역 인문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대학이다. 대학은 인문 관련 단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과 조직이 안정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인문센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학교가 공공 문화사업의 운영기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문화재단)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운영기관을 별도로 공모하는데 대학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지역 운영기관은 대학교, 국악협회, 문화원 등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은 광역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대학이 위치한 기초 단위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대학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광역인문센터는 인문학 강의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인문학 사업 전체의 통합공모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대학이 인문학과의 단위를 넘어서 이 같은 행정기획 사업에 관련 인력을 투입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학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연합하여 광역 인문센터를 구성해 볼 수도 있다.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가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점에 문화재단이 구성되지 않거나 참여가 여의치 않은 경우, 민간단체(연합)가 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다. 조직의 유연성과 기획력 등을 감안하면 민간단체에서 인문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광역 전체를 포괄하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문화재단, 연구원 내 지역학센터, 광역도서관, 문화원)과 민간(대학, 민간단체)의 어떤 기관이 인문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든, 센터는 공공조직이기에 공공의 규칙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 어떤 기관이 더 효과적일지를 선택적으로 짐작하기는 어렵다. 일단은 공모를 통해 인문센터 지원을 받고 1~2년 정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역 인문센터는, 광역시도별 사업관리, 중앙 전담기관과 사업 관리에 대한 역할 논의, 중앙 전담기관과 협력사업 기획 및 관리, 기초 자치단체 단위 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민간 및 타 기관 협력 사업 구성 및 개발, 지역별 인문사업 현황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초지자체에서는 광역 인문센터가 기획·공모한 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인문단체들이 있을 것이고, 모든 지자체는 아니지만 광역 인문센터처럼 기초단위의 인문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일단 모든 광역 단위에서는 인문센터가 반드시 역할을 담당하지만 기초 단위에서는 별도의 조직이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현재는 광역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지만 초기에는 기초단위 센터를 운영하고자 했으며, 최근에는 기초단위의 지역거점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때 모든 기초단위에 센터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인문사업에서도 이처럼 기초단위의 추진 체계는 유연하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인문사업 추진 체계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광역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은 시군구의 문화재단, 연구원, 문화원 같은 문화기관이 될 수 있고, 민간은 대학, 관련 협력 단체, 서점 같은 곳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이 지역 인문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지는 알 수 없기에 광역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1~2년 정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 3. 인문문화진흥센터 사업 구성

광역별 인문문화진흥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기존의 인문정신문화 사업들이 유지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인문문화진흥센터의 사업으로 배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업 추진 체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실현되기 힘들다. 따라서 기존 사업들의 사업 대상 등을 포함하여 인문정신문화 사업들을 광역시도별 인문문화진흥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될 가능성이 더 크고 현실적이다. 지역별 인문문화진흥센터들은 지역 내 인문프로그램들이 보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수행체계를 명확히 갖추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광역시도별로 인문정신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특색의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가. 광역별 통합공모사업형태로 전환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 인문문화진흥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대상 기관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기획하여 연차별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인문정신문화 사업 통합 공모에 지원하도록 한다. 기존의 인문정신문화 사업들이 진행해 온 사업 영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시설 등 다양한 지역 내 시설들에 세대별, 주제별, 목적별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다년간의 사업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중앙인문전담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자격 기준을 갖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광역 인문문화진흥센터 지정 및 위탁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인문전담기관은 광역 인문문화진흥센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모니터링, 성과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하여 중앙인문전담기관과 지역 인문문화진흥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 사업을 모색하도록 한다.

〈표 4-6〉 통합공모 사업 프로그램 구성 주제 예시

주제	대상	지역	융합
예시		예시	
인문치유	생애주기별 행사	광역 지역 전체	사회복지 연계
마을 공동체 육성	원주-이주민 협력	기초(시군구) 전체	농어업인 생활연계
전통문화 생활계승	신중년, 노인...	농촌 중심지	지역관광 연계
인문지식함양	지역 내 취약층	직장, 공장 등	생활체육+문화
.....	.....	.....	.....

기존의 사업 체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박물관 등 기존 주요 운영 시설과 주요 수요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지역 특색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추진 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존 주요 브랜드 사업들을 수행해 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인문역량과 문화역량 강화와 지역 인문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기초 마을 단위까지 생활인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운영의 효율화와 자치분권에 대한 기여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나. 통합공모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광역단위 통합공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계획할 때, 사업 운영목표를 구체화하고 세부 목표를 상세하게 설정하여 사업관리의 어려움을 예상한 기초 기획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율에 기반한 방만한 사업관리가 나타날 수 있다.

광역 단위에 인문사업의 수행 지역 선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 진행 초기부터 광역 지역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 확대 계획이나, 문화적 취약 지역 우선 시행계획 등을 상세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통합공모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역할의 강화를

수반하여야 한다. 광역 단위에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년 계획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예산의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사업 예산계획은 광역센터 단위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공모사업으로 지역별 인문정신문화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업무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인문문화진흥센터에서도 성과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역량의 차이에 대한 지원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중앙인문전담기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 제4절 소결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는 많은 사업 수행기관의 존재와 인문전담기관의 한정된 역할 수행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였다. 우선, 중앙인문전담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본부 단위 사업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롭게 인문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하게 된다면, 위탁고시와 법령상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 규모와 조직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지역의 인문 진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역단위에 인문문화진흥센터를 설립하여 광역 단위에서 다양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인문정신문화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인문문화진흥센터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통합 공모방식의 사업 수행을 제안한다. 지역의 자율적인 기획과 다년간의 예산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인문정신문화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색의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인문정신문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지역 내 인문 역량 강화와 인문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켜서 전체적인 문화적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 체계 구성과 재편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민간의 인문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 요약

---

### 1. 현행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체계상의 문제점

#### 가. 다수의 사업 수행기관으로 통합적 관리 어려움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프로그램들은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가 여러 사업들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이 분산되어 있고, 사업 수행기관의 변동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성과관리도 각자 기관에서 알아서 수행하는 구조로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2023년 민간보조사업 평가에서도 인문정신문화 사업은 관련 법이나 기본계획 설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근거는 명확하고 국민들의 인문정신문화 확산과 일자리 제공 및 문화적 실험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 등의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수의 보조사업자 및 다단계 구조로 추진되고 있어 그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 운용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사업 규모 감축을 통해 사업자 정비와 다단계 추진 절차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

전문가 자문의견에서도,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면서 관리의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사업 수행 체계하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에 대하여 묻은 결과, 가장 문제점으로 꼽힌 것은 ‘인문 프로그램 사업 수행 인력 부족 및 충원의 어려움’이었다. 현재 전담기관과 사업 수행기관들 모두 인문정신문화 사

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인력 부족 시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에 인력이 우선 투여되어, 인문정신문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인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다. 잦은 사업 주체 변동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사업 수행 담당자들은 사업 기획과 수행에 변동이 잦아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정책기조의 변경으로 계획에 없던 신규 사업을 갑자기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어렵게 만든 신규 사업들을 문제부의 기조에 따라 타 기관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허탈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어렵게 신규 사업을 만들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타 기관으로 사업을 이관해야 하는 경험을 한 경우, 새롭게 사업을 담당하게 되더라도 또 이전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사업 기획과 수행에 임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라. 전담기관 업무의 협소한 운영**

현재 인문정신문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할 때에도 인문정신문화 사업 전담기관은 지정 고시의 업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문정신문화 사업 전담기관은 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운영되어 왔고,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교류 사업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정책건의나 사업 수행 기관 지원 및 사업 모니터링 업무도 시행하지 못하였다. 전담기관이라고는 하나 별도의 운영예산은 없이, 사업 관련 예산만 배정되어 사업 수행 연관 업무(홍보,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등)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수행기관들은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업무들만 수행해 왔고, 인력운영 또한 최소한의 정규직 인력 투입과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만 수행하였다. 따라서 홍보, 사업 평가, 정책 건의, 교류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필요한 부분을 필요에 따라 시기별로 단기로 수행을 하거나, 별도의 외부 용역을 통해 해결하였다.

## 2. 행정 추진 체계 참조 사례 검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추진 체계의 구성 사례를 탐색하기 위하여 첫째, 정부 조직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례, 둘째, 공공 및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 셋째, 공기업(공공기관)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방위사업청과 재외동포청 개청의 사례는 직접 운영의 사례이며, 공공 및 민간위탁의 사례로는 서울 중앙주거복지센터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사례를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새롭게 공공기관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로는 서울50플러스재단, 사회서비스원의 사례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들의 추진 체계 사례를 정리하였다.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한 결과, 해당 행정서비스의 특성이나 주체, 대상, 예산,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행정 추진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행정 서비스 수요의 발생 등으로 직접운영, 공공 및 민간위탁, 공공기관 설립의 행정 추진 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에 따라 직접운영, 공공기관 설립 등의 행정 추진 체계 마련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분야 및 서비스 대상의 범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적,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 간에 형성될 수 있는 유착 등의 관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가지원을 담당할 행정기관을 선정하고 운영 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는 반대로 자활 및 주거 등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규모 대상 서비스 지원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해당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추진 체계 발전 방안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는 많은 사업 수행기관의 존재와 인문전담기관의 한정된 역할 수행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였다. 우선, 중앙인문전담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본부 단위 사업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롭게 인문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하게 된다면, 위탁고시와 법령상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 규모와 조직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지역의 인문 진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역단위에 인문문화진흥센터를 설립하여 광역 단위에서 다양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인문정신문화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인문문화진흥센터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통합 공모 방식의 사업 수행을 제안한다. 지역의 자율적인 기획과 다년간의 예산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인문정신문화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색의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인문정신문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지역 내 인문 역량 강화와 인문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전체적인 문화적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 체계 구성과 재편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민간의 인문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정책과제

---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상황과 시대변화의 환경적 요인 속에서 인문학의 학문적 위기의 지속과 사회적 수요의 증가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보급은 인문학 전공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들은 민간 영역에서 인문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자율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보고서 분석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앙인문전담기관은 제 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의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와 체제 정비를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인문문화진흥센터의 역할을 지원하고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인문문화진흥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특색이 있는 인문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지역 내 인문정신문화 사업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에도 적절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년간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상의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추진 체계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인문정신문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힘들 수 있다.





---

## 참고 문헌

- 강경화 · 최희성 · 이시원(2017),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 및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1(2), 51-76.
- 기획재정부(2023), 「열린재정」, 재정분석통계.
- 고경호, & 김태연(2016), 민간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충남 지역산업 협의체 사례,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5), 294-304.
- 고용노동부(2018), 「2018년 재정(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2018), 「정책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
- 김강산(2022),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제112호.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T/F 2022-03.
- 김도희·김동일(2022), 공공재로서의 지역문화예술: 지역문화예술코디네이터 운용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과문화」, 9(4), 29-58.
- 김복수, 강돈구, 이장섭, 전택수, 오만석, 박동준(2003),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서울: 보고서.
- 김승재(2012), 부천의 지역문화 거버넌스 체제에 관한 연구-시각문화영역을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윤경·이경진(2021), 문화정책의 참여적 거버넌스 원칙 정립을 위한 법률 분석 연구, 「사회과학논집」, 52(2), 1-22.
- 김재현, 태유리, 이효정, 임운정(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1-99.
- 김창진·김종래(2022), 지역문화활동가의 사회적 자본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중간지원조직 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6(2), 203-234.
- 김태영(2016),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정부학연구」, 22(2), 81-125.
- 김효정(2013),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홍수(2004), 문화거버넌스 모형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축제정책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나보리, 성연주(2022), 지역문화거버넌스 활성화에 있어 관계적 지역문화자원의 역할: 서울시 자치구 문화 분권형 사업참여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정책논총』, 3 6(2), 5-31.
- 류명희(2019), 문화예술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에서 중간지원 조직의 매개효과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류춘호(2012),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실태와 정책방향: 부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문태현(2005),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정책거버넌스의 성공요인분석: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2), 337-359.
- 박광무·이연용(2008), 문화도시조성 관련 갈등해소 과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작동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8(0), 1-20.
- 박규홍(2011), 지역문화거버넌스의 성공 요인, 『한국거버넌스 2011년 하계 공동학술대회논문집』, 한국거버넌스학회
- 박영정(2012),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경과 및 과제. 월간 노동리뷰, 2012년 7월호. pp. 5-20.
- 박혜자(1998), 지역문화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모형 연구. 『도시행정학보』, 11, 207-233.
- 박혜자·오재일. (2003). 문화행정에 있어 분권화와 정부 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5(4): 953-975.
- 박치성 · 정창호 · 백두산(2017), 문화예술지원체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6(3), 271-306.
- 백옥선(2017)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 간 거버넌스 실태분석 『문화정책논총』, 31(1), 130-156.
- 백학영·김경휘·박경하·엄태영·조성은·최상미·허신행(2019), 「광역자활센터 공동 운영 매뉴얼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사업조사연구, 2019-1.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1),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보고서.
- 백현빈(2018) 신도시 공공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문화 거버넌스 연구: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2(1), 31-54.
- 서순복·함영진(2008). 협력적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영국 버밍엄 문화영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241-267.
-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3년 세부사업 계획서」, 2022. 12. 23.
- 서울특별시(201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300호.

- 성연주(2022),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형성과 민관의 동상이몽: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의 결속형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30(2), 7-57.
- 성연주(2021), 무엇이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가? - ‘네트워크’의 역할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예령(2019),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33(2), 137-166.
- 손유진·김성수(2023), 주민참여와 지역문화 거버넌스-청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7(1), 145-176.
- 송안나·김세준(2020), 문화기반 마을공동체 성장을 위한 정책집행환경 연구, 『문화정책논총』, 34(3), 121-154.
- 송두범(2011), 충남 사회적경제를 꿈꾸다-충남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열린충남』, 56, 31-39.
- 송미·윤희정(2019), 문화 · 관광 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간 협력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기여 : 춘천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3(6), 5-17.
- 신은경(2011),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이용요인과 재이용연구: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오수길·김홍수(2004), 새로운 문화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문화축제에 대한 Q 방법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16, 33-45.
- 유상진(2019),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현황과 향후 과제, 『지역문화연구』, 18(0), 23-38.
- 윤광재·신성대·이희석(2011), 문화거버넌스 구축사례 연구: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 이명석(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321-338.
- 이명석(2016), 거버넌스: 신드롬 또는 새로운 행정학 이론?, 『국정관리연구』, 11(3), 1-25.
- 이왕태(2018),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방위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재희(2012), 문화복지와 부산문화재단의 역할, 『지역사회연구』, 20(4), 161-182.
- 조황식(2007), 지역문화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 서구, 안동시, 의성군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 채원호·주동범(2003), 프랑스 문화거버넌스 연구: 문화정책 및 행정을 중심으로, 『한

국정책과학학회보」, 7(3), 360-376.

- 최정은(2023). 도시포용성 증진을 위한 문화 거버넌스 연구 -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 「문화와융합박사학위논문」, 45(3), 365-383.
-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201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획재정부.
- 한석진(2022), 한국형 문화예술 거버넌스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문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89(5), 89-102.
- 한승준·박치성·정창호(2012),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영국, 프랑스,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2), 257-291.
- 현영란(2015), 지방정부역량이 지방정부와 비영리조직간 협력적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2), 259-282.
- 황유택(2022), 우리가 목소리를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 서울문화재단 내 민관거버넌스를 중심으로, 2022 [예술청 아고라] 첫 번째 주제: 문화예술계의 '거버넌스 신드롬'은 기각되었을까? 2회차 포럼: 민, 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서울의 거버넌스. <<https://youtu.be/8UUDUJ5LTmk>, 2022. 10. 10.>.
- ArgoteL(2013), Organization learning: A theoretical framework. Organizational learning: creating, Retaining and Transferring knowledge, 31-56.
- Argote, L.(2012), Organizational learning: Creating, retaining and transferring knowledge.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Arnstein, R.(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35(4), 216-224.
- Briggs, X.(2003), Working the middle: Roles and challenges of intermediaries, The Art and Science of Community Solving Project at Harvard University.
- Denhardt, R. B., & Denhardt, J. V.(1999), Leadership for change: Case studies in American local government, Vol. 143, Leaders.
- Gibson, G., O'Faircheallaigh, C. & MacDonald, A.(2008), Integrating Cultural Impact Assessment into Development Planning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Workshop), Fargo, ND: IAIA.
- IAIA(2009), What is impact assessment?, Fargo, ND: IAIA.
- Kooiman, J.(2003). Societal governance (229-250).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Kooiman, J. (Ed.)(1993),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Sage.
- Kooiman, J., & Van Vliet, L. M.(1993), Governance and public management.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Lessons from contemporary European experience, 58-72.
-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09), Status report and information circular: developing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Yellowknife, Canada: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
- Malet, J., & Bazin, C.(2005), La France bénévole. Publication du Centre d'Etude et de Recherche sur la Philanthropie.
- Newman, M. E.(2001), The structure of scientific collaboration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8(2), 404-409.
- Peters, B. G., & Pierre, J.(2006), Governance, government and the state. The state: Theories and issues, 209-222.
- Peters, B. G., & Savoie, D. J. (Eds.)(1995), Governance in a changing environment. McGill-Queen's Press-MQUP.
- Pierre, J. (Ed.)(2000), Debating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OUP Oxford.
- Pierre, J., & Peters, B.(2005), Governing complex societies: Trajectories and scenarios. Springer.
- Prigogine, I.(1998), "The Networked Society", IST 98 Vienna,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Conference & Exhibition, Vienna, 30 November, 2 December(European Commission, Austrian Ministry of Science & Transport).
- Rhodes, R. A.(1990), Policy networks: a British perspective.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2(3), 293-317.
- Rhodes, R. A. W.(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4), 652-667.
- Salamon, L. M.(2012), Subsidiarity and the new governance: reflections on the lombard experience. Subsidiarity Governance: Theoretical and Empirical Models, 19-30.
- Salamon, L. M.(2000), The new governance and the tools of public action:

An introduction. Fordham Urb. LJ, 28, 1611.

- Schmitt, T. M.(2011), Cultural Governance as a conceptual framework. Göttingen : mpimmg.
- Sorensen, E., & Torfing, J.(2005), Network Governance and Post-liberal Democracy. Administrative Theory& Praxis, 27(2), 197-237.
- Sørensen, E., & Torfing, J. (2005a). The democratic anchorage of governance network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8(3), 195-218.
- Sørensen, E., & Torfing, J.(2005b), Network governance and post-liberal democracy.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7(2), 197-237.

#### 〈홈페이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mcst.go.kr)
- 방위사업교육원 홈페이지(dapa.go.kr/eduhome)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dapa.go.kr)
- 서울 50+재단 홈페이지(50plus.or.kr)
-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seoulhousing.kr)
-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kcpass.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kdisw.or.kr)

#### 〈보도 자료〉

- 고용노동부(2018. 3. 22.),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2018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 선정(보도 자료).
- 정의당(2016), 「문화예술의 정의로운 전환 공약집(20대 총선 문화예술공약)」.
- 정의당(2018. 5. 11.), 지방선거 문화 공약 발표(보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 예술인 복지 지원, 권리침해 피해 구제 전담 조직 만든다: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 (2022. 9. 01.)

#### 〈기사 자료〉

- 이데일리(2022. 9. 1.),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신설...피해구제 전담조직 만든다.
- 뉴스저널리즘(2022. 9. 1.)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신설...복지 지원·권리 보호.

〈법 및 조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8607호.
-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441호.
- 「방위사업법」. 법률 제18805호.
- 「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619호.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67호.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 「예술인복지법」. 법률 제18466호.
- 「정부조직법」. 법률 제17814호.
- 「주거기본법」. 법률 제18561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89호.





---

# ABSTRACT

## **A Study of Improvement Plan for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Service**

Sung-Woo Lee

The main goal of the research is to improve the supply system of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Services. The present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Service system has several problems: Multiple executing organizations, A lack of professional workforce, Frequent program changes, A narrow area of work of significant agency for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Service.

To solve the main problems, we suggest two alternatives that reinforce the central agency for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Service based on an extension of budgets and organization scale and create a new organization for only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Service.

Additionally, we suggest making new regional agencies on every metropolitan council and regional agency execute new regional programs based on plans for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Service. The urban board must make a multi-year plan for the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Service.

### **Keywords**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Service, Improvement System, Reinforce Central Agency, New Regional Agencies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연구

부록

##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 기관의 역할, 지역별 인문 사업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반드시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3. 07.

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정책연구실

조사 대행: (주)글로벌리서치 김성린 차장☎ 02-3456-1723)

\*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300분께 선착순으로 소정의 답례품(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8월 초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답례품 송부를 위해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해 주신 정보는 상품 발송 용도로만 사용되며 조사가 끝난 후 폐기됩니다.

답례품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의견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			
성함		핸드폰 번호	

Q1.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들은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업 수행체계하에서 다음의 요인들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요인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예산 배정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2) 전문인력의 양성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4) 인문 프로그램 실행 시설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5) 인문 프로그램 사업 수행 인력 부족 및 충원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6) 인문정신문화 사업 중복	①	②	③	④	⑤
7) 사업 모니터링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 인문사업 관련 연구 진행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9) 인문전담기관 역할 수행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0) 기관 간 정보교류 부족	①	②	③	④	⑤
11) 수행사업의 변동과 잦은 이관	①	②	③	④	⑤

Q2.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 추진 체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요인들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요인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인문정신문화 정책 예산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개발 능력 강화와 신규 프로그램 지속 개발	①	②	③	④	⑤
4) 인문 프로그램 실행 시설 확대	①	②	③	④	⑤
5) 관련 연구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사업 기획 조정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7) 인문사업만 수행하는 기관 신설	①	②	③	④	⑤
8)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 지정 기간 확대(3년 → 5년)	①	②	③	④	⑤
9) 네트워크형 사업체계 형성 및 강화	①	②	③	④	⑤
10) 온라인 포털 서비스 강화	①	②	③	④	⑤
11) 인문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12) 인문관련 자료 아카이빙	①	②	③	④	⑤

**Q3.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 중 다음의 요인들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요인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예산 관리	①	②	③	④	⑤
2) 전문인력의 양성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개발 기능	①	②	③	④	⑤
4) 전담 시설 확보	①	②	③	④	⑤
5) 정책 개발 및 건의 기능	①	②	③	④	⑤
6) 정책 조율 기능	①	②	③	④	⑤
7) 민간 사업 지원 및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⑤
8) 지역 단위 사업 개발 지원	①	②	③	④	⑤
9) 온라인 포털 서비스 운영	①	②	③	④	⑤
10) 사업 성과 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11)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①	②	③	④	⑤
12) 강사 관리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13) 우수 프로그램 관리 및 공유	①	②	③	④	⑤
14) 국내외 교류사업 기획 및 시행	①	②	③	④	⑤
15) 홍보사업 기획 및 운영	①	②	③	④	⑤

**Q4.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요인과 필요 정도는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요인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담기관 사업 운영 예산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①	②	③	④	⑤
3) 인문 프로그램 개발 기능	①	②	③	④	⑤
4) 인문 프로그램 전담 시설 확보	①	②	③	④	⑤
5) 정책 개발 및 건의 기능	①	②	③	④	⑤
6) 정책 조율 기능	①	②	③	④	⑤
7) 민간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지역 단위 개발 지원	①	②	③	④	⑤
9) 온라인 포털 서비스 운영	①	②	③	④	⑤
10)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①	②	③	④	⑤
11)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①	②	③	④	⑤
12) 강사 관리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13) 우수 프로그램 관리 및 공유	①	②	③	④	⑤

**Q5. 귀하께서는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달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 운영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민간 법인 신설                      ② 법정 공공기관 신설                      ③ 신설 필요 없음  
④ 현행 유지 속 지정 기간 연장(3년→5년)    ⑤ 현행 유지 속 예산 등 지원 강화

**Q6. 귀하께서는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위해 지역별 인문 사업 기관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Q7. 각 운영 방식으로 지역별 인문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지역 대표 도서관 중심 운영	①	②	③	④	⑤
2) 지역 문화재단 중심 운영	①	②	③	④	⑤
3) 지역별 직영 공공센터 신설 운영	①	②	③	④	⑤
4) 민간중심 네트워크 구성 운영	①	②	③	④	⑤
5) 지역 대학 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6) 지자체 자체 운영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 통합 공모 형태로 지자체 운영	①	②	③	④	⑤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집필 내역

---

### 연구 책임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 제2장, 4장, 연구 총괄

### 공동 연구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4장

윤지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제3장 제2절 일부

오문준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위원: 3장 1절, 2절 일부

##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연구

---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3년 11월 17일

발행일 2023년 11월 17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78-9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3.e8>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이성우·조현성·윤지연·오문준(2023),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http://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3.e8>



9 788960 359789  
ISBN 978-89-6035-978-9